

안기부가 민주인사 살해은폐 주도

유가족, 박창수 씨 등 사인 규명요구 항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단체연대회의 : 상임의장 이창복)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족 : 회장 배은심) 소속 회원들이 지난 12일 낮 12시에서을 내곡동 소재 안기부 청사를 항의방문해 안기부 해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용공조작 고문살인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유가족들은 안기부(중앙정보부)에서 자행한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안기부법·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을 요구하였고 이중 찬 안기부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현재의 안기부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그 구성원 일부를 의원 면직시키는 방식이 아닌,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안기부 직원들이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은폐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 이래 안기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에는 △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동백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서울대 교수 최종길 씨 △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를 선포한 지 1주일 만인 74년 1월 긴급조치 첫 위반자로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75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번사체로 발견된 재야지도자 장준하 씨 △ 89년 안기부 직원 도연주 씨 등에 의해 거문도까지 유인되었다가 외상에 의한 피하출혈이 7군데 나 있는 번사체로 발

견된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 △ 전국노동조합협의회(현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부 의장을 역임하면서 91년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 대기업노조 대표자들과 이를 논의하던 중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차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안양 병원에 입원하여 5월 6일 병원 마당에서 병원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된 박창수 씨 등이 포함돼 있다.

함은경씨 불고지죄 무죄

항소심서 원심 뒤집고 승소

95년 10월 충남 부여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생포된 남파간첩 김동식(36)을 생포 한달 전인 같은 해 9월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서 만나 통일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함은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남파간첩을 만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불고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은경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김동식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씨의 불고지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라며 "그러나 함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신분 공개 등에 대한 김동식의 진술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5년 김동식 사건과 관

련해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박창렬, 김태년 씨가 이미 간첩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함씨와 같은 불고지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던 허인희(국민회의 당무위원) 씨도 현재 재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른 '전북지역 여성 의식화 교육'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 방지법(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 법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때 : 6. 24 ~ 25
문의 : 0652-87-7324

▶ 양심수 석방 기도회

때 : 7. 6(월)
곳 : 명동성당
문의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02-3672-0251)

※ 계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 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시내버스 CCTV로 감시 후 징계

조기출발 이유, 노조간부만 10여명 3일 징적처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시 시민단체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조합 간부들의 감시와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14개회사 중 한발여객(사장 박성준)이 CCTV를 악용하여 노조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3분 5분 먼저 출발한 10여명을 징계 위에 회부하여 감봉과 3일 징적 등의 징계를 내려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조직부장 이종근씨, 박광문씨, 송재창씨 등 10여명은 "회사가 일관성없이 어느 때는 종점에 최대리와 이과장을 파견하여 조기 출발할 것을 지시하고, 기사들이 조기 출발하자 이를 근거로 CCTV에 잡혔다며, 회사에 친밀한 운전기사는 제외하고 노조간부와 열성노조원만 편파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차에서도 "순번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을 열성노조원에게만 배차를 열악한 지역과 교대시키는 등 순번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대전시내 지하철공사로 인해 병목현상이 급증하는데도 조기출발은 물론 늦게 도착하는 차량기사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CCTV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징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대전동부터미널에서 옥천까지 노선에서 13년전에 세워 놓은 시간 50분을 수정없이 그대로 운행토록 해 차량이 급증한 현재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또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할 경우 20분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계속해야 해 그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운행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와 배차에 대해 노조(지부장 이광식)는 "사측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지난 5월중순부터 3차례나 상무집행회의가 무산됐다"며 "배차를 노조간부에 대해 오전 중에 해줄 것"을 촉구하고 "노조간부의 징계에 악용되고 있는 CCTV의 폐지"를 요구했다.

'노점활동 합법화' 요구

노점상 4천명 집회

지난 12일 오후 1시 장충단공원에서 노점상 4천여명이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 회장 이필두) 창립 10돌을 맞아 제11차 6.13정신 계승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백만노점 전진대회를 연 뒤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전노련의 이필두 회장은 집회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노점상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차별적인 단속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노련은 "실직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해보자고 시작하는 것이 노점상인데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나 생계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서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노점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전노련은 대회를 끝마친 뒤 "11차 대회는 IMF 구제금융 실시 이후 민중들의 생존권이 말살되고 김대중 정부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실업문제 해결없이 노점상의 문제가 결코 해결 될수 없음을 자각하고, 노동자·도시빈민·청년학생과 강력한 민중연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전노련은 한편 이날 거리행진 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여러명의 노점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어두운 먼 왜 들추나'

교총, 영화 「여고괴담」 반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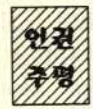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김민하)가 교권침해 우려를 들어 남양영화 「여고괴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는 억울하게 죽은 여고생이 귀신이 돼 못된 교사들을 살해한다는 내용이다. 「여고괴담」은 교사의 폭력과 성희롱 장면, 나이든 여교사를 '늙은여우'로, 남교사는 '늑대' '미친개'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언급으로 교총의 '괴담반응'을 야유했다. 영화보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교총의 태도가 더 공포스럽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영화평을 통해 "학교가 '괴담'의 무대가 되는 이유는 입시라는 굴레와 학교의 폐쇄성, 성적과 집안환경을 두고 인생을 '목매달아버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PC통신 이용자들 대다수도 교총의 '법률적 대응책 마련' 움직임에는 '치졸하다'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고질적인 학내폭력과 촌지강요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거나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교사단체인 교총의 대응에 상당히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자치단체장 단독출마와 유권자의 선택권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에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2명(전남·북도지사)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이다.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가슴을 졸이고,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써야 하는 것에 비하면, 이들은 행운도 보통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단독 출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특정 후보자의 자질이 워낙 뛰어나서 감히 누가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는 아예 후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의 정당 배타성을 클로즈업 시키고, 이로써 다른 지역의 반발투표를 노리는 알뜰한 전략도 있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후보자가 1인일 때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무투표방식과 최소한의 신임획득의 방식이 있다. 대체로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전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제67조 제3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91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자치단체장 후보가 1인일 때의 당선자 결정방식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식이라면, 그것은 권력의 무례함에 불과하다. '사실은 이 점을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선거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모르는 체하고 있었고, 언론매체 역시 이 점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유권자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기가 언론은 이 점을 알았더라도 아예 보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를 일이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말조차

결국 6·4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그 잘못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계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두 개의 또 다른 집단에 의해서 묵인되었다. 언론과 정권이 그것이다.

의식이 우리 언론의 타고난 속성이니까 말이다. 다음으로는 투표지 양식이 문제였다.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자 1인의 기호와 이름만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투표용지라면 그것을 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그 투표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 1인의 기호와 이름만 적어 놓은 투표지를 보고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난처함에 빠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양식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단독 후보자를 낙선시키는 방법은 그 표를 무효표로 만드는 것이다. 투표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든지, 표시란 밖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무효표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면, 그 후보자는 낙선하게 되고, 그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언론의 직무유기

결국 6·4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그 잘못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계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두 개의 또 다른 집단에 의해서 묵인되었다. 언론과 정권이 그것이다. 만약 언론매체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수준이라면, 그 언론매체는 국민의 공기로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정부’ 입을 자부하는 현 정권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정권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줬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도리어 이 점에서 앞서의 정권들과 동질성을 나누고 있었다. 그 결과 전국 25개 지역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은 짓밟히고 말았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2 호

1998년 6월 2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통신ID)jonespark(천.나.녹.두) ·E-mail:human@kor.inp.or.kr ·Homepage:http://kor.inp.or.kr/jonespark

비리폭로 교직원 해임

도교육청, 이용호씨 징계 보복성격 짚어

자신의 저서를 통해 교육계의 비리를 고발했던 교직원을 도교육청이 해임한 데 대해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용호씨(진안 정전중학교 행정실장)가 지난 94년 4월부터 97년 6월까지 장수 천천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관련증빙서류 없이 현금을 인출해 횡령했으며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해서 공금 44만 3천원을 횡령했고 관사운영비를 부당하게 인출했으며(연료비 및 전기료 1백 44만여원) 결재권자 결재 없이 지출하면서 영수증서도 첨부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기에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실장의 빈번한 출장으로 근무부실,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 불일치 및 편철 부적정 등이 징계사안에 해당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 실장이 인사위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실장의 저서에서 지적됐던 최문자 전 장수천천중학교장(도학생해양수련원 운영부장)은 이날 감독소홀과 학교운영부실, 회계질서 문란 등 이유로 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용호 실장은 장수 천천중학교 등 11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체험

을 토대로 지난 1월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는 책을 펴내 교육계 비리의 실상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에 대해 이 실장은 “교육청이 보복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박일

이 이용호씨를 해임한 것은 보복성 감사에 따른 과도한 중징계”라며 “이는 교육계가 자정운동을 통해 교육개혁을 이끌어어나가는 데 도교육청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난했다(논평, 하단 상자에 요약).

「참교육 학부모회」 김희영 전주지회장도, 지난 90년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전 이문옥 감사관을 예로 들며 “이용호씨 해임은 비리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도교육청의 ‘보신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용호씨 해임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요약)

도교육청이 정전중 행정실장 이용호씨를 해임한 사태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보복성 감사로 과도한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도교육청이 해임 사유로 밝힌 횡령, 부당집행 등 개개 사안을 옹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도교육청이) 정황을 참작, 과감한 개혁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열망을 저버리고 말았다.

1. 이번 사건에서 한 개인의 지난 10년간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징계사유를 찾아낸 부분은 도교육청의 감사관행에 비추어 보복성 감사이다.

1. 이용호씨의 저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교육계 모습은 교육가족이면 누구나 수긍하는 내용이다. 그러기에 도교육청은 저서에 나타난 몇몇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적인 개혁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번 이용호씨에 대한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가 자정운동, 자정의 목소리를 내어 교육개혁을 이끌어어나가는 데 도교육청이 찬물을 끼얹었음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이용호씨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를 철회하고 화합과 화해의 조처로 교육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1998. 6. 18 전교조 전북지부

위조지폐범 "허프"를 구속하라!

[군산미군기지 시민모임], 기지 내 세번째 기습시위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회원 20여명은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반경 군산미군기지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군산 미공군 사령관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에 대한 항의와 다시 한번 서한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평화와 인권 100호 참조』).

이날 시민모임은 지난번보다 많은 5대의 차량으로 기습적으로 기지 안으로 들어가 위병초소를 통과한 뒤 대열을 짓고 "위조지폐범 구속! 미국송환 반대! 사령관 사과!"를 외치며 한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미군기지 내 시위로서는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시위에는 미군이 신속하게 나타나 대처가 이루어졌으며, 뒤늦게 나타난 한국경찰은 시민모임 쪽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꼭 기지 안에서 해야 하나, 우리 입장 좀 생각해 문 밖에서 해달라"고 몇번씩 요청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반응조차 없다. 또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땅을 밟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응수하고 "지금까지 미군들은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은 거의 없으며, 불평등한 한미협정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주권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더 이상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잠시 후 나타난 사령관 직속 공보처 직원에게 시민모임은 지난번과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사령관의 답변을 요청하고 이번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 보다 강도높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은 시민모임에 공문을 보내 "위조지폐 피

의자는 미공군 제9전투비행단 통신대 소속 병장 데일 엘 허프(Dale L. Huff)이며 피의자는 현재 "한미행정협정상 재판 결과 실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속할 수 없어 기지 내에 주거제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미군 측에서 재판 포기 요청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검찰이 미군범죄에 대해 시민모임 쪽에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5항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실직자 · 북한동포 돕기 평화행진

「실직자 생활조례」 제정 촉구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21일 전주시 다가공원에서 '코아백화점까지 평화행진을 갖고 실직자들과 북한동포들에 대한 도민의 지원을 요청했다. 「평화대행진 추진본부」는 '실직자에게 희망을! 동포

에게 나눔을!'이라는 구호를 내건 평화행진을 마친 뒤 충정교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연합예배'를 가졌다.

다가공원에서 열린 평화대행진 출정식에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전북도에 "전북지역 실직자를 위한 생활조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재벌개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근절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에 전북도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 행사와 동정 】

▶ 고용·실업대책 촉구를 위한 전북도민 서명운동

때 : 매주 금요일 오후
곳 : 외환은행 앞
문의: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0652-74-8042)

▶ 대중강연회 — '현 정세와 우리의 나아갈 길'

때 : 7. 3(금) 저녁 7시
곳 : 숲정이 신협 3층
강사: 박세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문의: 노동자 통일대 녹두 (0652-253-3569)

※ 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 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76-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국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다시 고개드는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행정자치부에 강력 항의

국민생활 침해, 노동통제 수단으로 악용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 끝에 그 실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주민카드 제도 시행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에 의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99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해 카드구입비 3백억원 등 3백22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남)에 신청했으며,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포항공대에 의뢰해 놓았다. 이 두 곳의 연구결과는 오는 6월말 경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 9일 김정길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20일에는 성명을 내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전자주민카드문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주민등록법 개정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 해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불씨는 채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알림1]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인식을 높이고 국내외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알림2] 다음 호부터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음 호(103호)부터 주간 <평화와 인권>의 모습이 바뀝니다. 좀더 자세한 인권소식 전달과 시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판형은 B5에서 A4로 키지고 본문 글씨는 9에서 9.5포인트로 커집니다.

[인권영화] 다큐멘터리 "22일간의 고백"

연출: 푸른영상 김 태일 감독(1997. 3 - 1998. 4 / 50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안기부가 새정부 들어 "정보는 국력이다"라며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분단상황을 역이용해 많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 온 안기부는 이번 북풍사건을 계기로 그 이름까지 바꾸기에 이르렀으나, 새로운 국정원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다 국민정부 들어서 안기부의 발판인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얘기는 문민정부 시절만큼도 들리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간첩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2일간의 고백"은 그런 사실을 증거해주는 첫 번째 목소리다.

"22일간의 고백"은 문민정부 하에 일어났던 두 가지 간첩사건에 관련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하나는 문민정부 초반에 대두된 안기부 개혁 분위기를 무력화시킬 썸으로 안기부가 만들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정치비자금 사건 정국과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일어났던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이다.

김남매 사건은 안기부의 프락치로 의심받던 배인오가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안기부의 간첩공작을 분명히 밝힌 사건이었다. 그러나 프락치의 양심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삼석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97년 9월에 만기 출소하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기부의 존재에 대해 강한 부정의 나타내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존재임을 힘주어 말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박충렬씨(당시 전국연합 소속)이다. 간첩협의를 받고 안기부에서 22일간 수사를 받은 박충렬씨의 심경변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명백한 물증도 없이 계속되는 수사에서 그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본다. 그는 끝내 간첩협의를 벗었지만 이후, 17년 동안 계속해 온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

"22일간의 고백"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인권탄압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다.

국민정부여 모두를 폭넓게 끌어 안아라

리수현 (익산 용안천주교회 신부)

한국처럼 양심수가 있다 없다 하는 엇갈린 주장이 길고도 지루하게 계속되어 온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 제서야 양심수가 간혀 있다고 김대중 정권은 분명히 선언하였다(한겨레 1998. 6. 15). 양심수, 이들은 따지고 보면 나라와 민족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조건없이 온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꿰어 맞추어 목에는 울가미를 씌우고, 손과 발은 포승줄과 쇠사슬로 팽팽 묶어둠으로써, 전혀 부끄럽거나 사회악적인 범죄를 행하지도 않은, 오히려 양심대로 뗏뗏이 행한, 가히 애국적 행위라고도 할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불법 연행하고 감옥살이시키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는 한심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양심수는 정치뿐 아니라 노동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솔하게도 탄압되어 왔다. 얼마 전에는 한총련 학생들이 대의원대회를 열었던 것을 기회로 이를 완전히 씩씩이하여 해체시키겠다고 정부는 시퍼런 칼을 갈았다. 이를 북과 평과리를 요란스럽게 쳐대면서 부추긴 자들은 물어볼 것도 없이 양심도 체면도 없이 변질에 이력이 나 있는 언론인들이었다. 이에 힘입은 정권은 한총련은 불법, 이적단체라고 몰아붙이며 즉각 상당수의 학생들을 구속시키는 전과(戰果)에 흡족해 하면서 야한 웃음을 띄우며 승리의 삼페인을 터트렸을지 모른다.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소인 밥을 얻기 위하여 직장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서, 이 부당한 폭거에 대한 정당한 항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들

발적으로 일어난 일부 과한 힘의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이라는 족쇄로 보복 대응하는 정권이 무슨 국민정부라고 내놓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결코 폭력을 비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힘의 사용도 정당화 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근한 예로서 며칠 밥을 굶은 사람이, 남의 가게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창살이

그 어떤 권력자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만큼은 절대로 손상시키고 훼손하고 유린할 권리나 자격이 조금도 없다... 만에 하나라도 군사독재정권이 했던 야만적인 행위를 김대중 정권이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장날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를 해야 된다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비정하고 불의한 사회 아니 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내려져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과 한총련 학생들도, 지금 법대로의 처리를 고집하는 사람만큼, 아니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다만 그들이 자기 주장과 소신을 지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했던 행위인데도, 그들 자신에게 살권이 없고 약자들이기 때문에, 정권자들과 기득권자들로부터 무조건 폭력이다 이적이다 불법적이다라는 딱딱한 고정된 틀 속에 사로잡혀 죽일 사람들로 내몰리기만 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언제쯤에나 다양한

안에 조화를 이룬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민주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언필칭 불법자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는 식의 팽랑하고 독선적이며 극히 사시적(斜視的)인 사고방식에서 헤어지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 나라가 이근안 같은 정통 악질 고문기술자들이 교묘하게 계속 압박하고 있는 사회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만큼은 절대로 손상시키고 훼손하고 유린할 권리나 자격이 조금도 없다. 양심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주장에 모 든 것을 걸고 있는 청년 학생들, 먹고 살기 위하여 울부짖는 노동자들이 이른바 국가보안법의 울가미에 어이없이 걸려든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절대로, 그리고 결코 그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극도로 유린까지 자행하는 처사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라도 군사독재정권이 했던 야만적인 행위를 김대중 정권이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장날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므로 이를 함부로 하는 자는 민중의 힘으로 언젠가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권은 양심수 석방에 어떤 때를 맞출 것이 아니라 즉각 단행해야 하며, 한총련 학생들과 노동자들에 대하여도 시각조정과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마치 좋은 어머니가 어떤 자식이든 일단은 자기의 따뜻한 품 속에 안아 주듯이 모두를 폭넓게 끌어 안을 수 있어야만이 참된 국민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3 호

1998년 6월 2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순정여성지사회관 ·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통신(D) onespark(전.나.북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전주월드컵 서민경제 압박

유치 여부, 공청회 등 시민여론 다시 들어야

신축과 증개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2002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 문제가 신축으로 최종 매듭지어졌으나 막대한 신축비용이 지방재정을 압박해 시·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유종근 도지사와 정동영·장영달 의원 등 전주월드컵준비 6인 소위원회는 최근 "국제축구연맹이 경기장 증개축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 신축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초 전주월드컵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민 1백만명의 서명까지 받아 유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자 타 광역도시와는 달리 유치비용 1500억원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월드컵 유치를 약속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전북도가 경기장 신축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경우 시유지 매각과 각종 공공청사 신·증축 유보, 행정장비 구입·교체 억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750여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북도도 지방채 발행과 불요불급한 사업축소·유보, 경상예산 절감 등을 통해 경기장 신축 지원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시유지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를 함부로 매각처분하는 것은 위험스럽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가 산출한 신축비용 1500억원도 건축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신축과정에서는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연간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후관리비용 마련에 관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월드컵 전주유치와 경기장 신축에 압력을 행사해 온 건설업자 등은 신축이 사회간접자본투자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비용 마련을 위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영개발 등 대형사업

이 대부분 유보될 것으로 보여 경기장 신축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일부 시민들은 "시와 도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국가경제위기'를 이유로 경기장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도민 1백만명의 서명까지 받아 유치한 월드컵경기가 무산될 경우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도 도내 정치권 일부 인사들에게는 압박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적 사정상 월드컵을 반납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전라북도는 늘 안된다'는 시·도의원들 사이에 팽배한 정서가 이들 여론을 멀리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공경찰 살아남기 작전' - 청년단체 탄압 줄이어 관악노동청년회 - 안민청 이어 진보민청

새정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청년단체에 대한 탄압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흥제동 대공분실은 지난 2월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 산하단체인 관악노동청년회 회원 8명을 연행한 데 이어 6월 2일 안양민주화 운동청년연합 9명을 일제히 연행했으며, 급기야 6월 24일 삼급단체인 진보민청 간부 5명을 흥제동 대공분실로 연행·구속했다.

경찰은 먼저 연행한 관악노동청년회와 안민청에 대해 "그들의 강령에 이적성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진보민청은 "개별단체에 대한 탄압보다 삼급단체인 진보민청의 '강령과 규약'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함으로써 진보민청을 이적단체로 조작·탄압할 것이 예상되며, 보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진보민청의 강령이 '이적'이라면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노동단체의 강령과 규약·회칙도 이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천명하고 이에 맞서 모든 사회단체 회원과 노동조합이 "나의 양심과 사상도 공안기관의 잣대로 보면 이적성이 있다"는 것을 공세적으로 천명하는 '양심고백서명운동'을 준비하던 터였다.

한편 안민청 구속자 가족들은 경찰이 새정부들어 부쩍 이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축소'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고 있는 사건이라며 흥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갯벌 보호구역에 양식장 축조

부안군, 곰소·줄포만 등 7~8 곳 특혜의혹

지난해 말 환경부가 갯벌 보호관리지역으로 발표한 곰소·줄포만 등에 부안군이 잇달아 대하양식장 인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96년부터 한 곳에 1천~2천5천여평까지 6~7곳에 대해 대하양식장 허가를 해준 데 이어 98년 초에는 임야로 돼 있는 갯벌지역에 축조식 대하양식장 1만평을 인허가했다. 또한 지목(地目)이 임야로 돼 있는데도 '산림훼손절차'도 없이 인허가되어 더욱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지목이 임야지만 산림으로 볼수 없는 갯벌지역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환경부가 갯벌보호관리지역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는 했지만 입법에 고도되지 않았고 시행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으로 시정되면 향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곰소 염전길 건너편 1만여평의 갯벌에 현재 양식장이 축조되고 있다.

인허가 지역인 곰소·줄포만 갯벌지역은 바다와 육지가 인접해 있어 갯벌역할이 필수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제공 : 전라매일 백정기 기자]

미군차에 치여 중상

신문배달 목사, 배상 오래 끌 듯

미군의 군용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과 한국 경찰의 소극적 태도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한 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새벽 6시경 군산시 나운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던 이영선 목사(군산 과수원교회·40)가 뒤에서 덮친 미군트럭에 받혀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미군 Croker Barry 중사(군산비공군 31특수작전대대 소속)은 피해 오토바이를

7~8미터 가장 밀어붙인 뒤 정지했다. 사고 당시 인근 여관에서 묵고 있던 돌러나온 30~50명 가량의 미군들은 택시운전사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경찰과 미군 헌병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이 목사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5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지만 정밀조사 결과 허리와 목에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이 목사는 "119 신고가 접수된 뒤 30여분이 지나도록 주위에서 잡담을 나눌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군들보다 초동수사 부실 등 한국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분통스럽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울초 출범시킨 선교센터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오다 사고를 당했다. 현재 목과 허리의 통증 때문에 병상에서 제대로 걷거나 앉기조차 힘든 상태. 어렵게 설립한 선교센터 일에 사고 후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목사는 "대미 자세에서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민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가해지는 미군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과 배상 시기도 1년이 지나야 하는 등 한국인 피해자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에 주목한다"며 "미군당국에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또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행정협정은 (공무집행중) 미군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배상금의 1/4을 한국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배상책임'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불평등한 이 규정내용에 대한 삭제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 행사와 동정 】

▶ 고용·실업대책 촉구를 위한 전북도민 서명운동

때 : 매주 금요일 오후
곳 : 외환은행 앞
문의 :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0652-74-8042)

▶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

때 : 매주 금요일 낮 12시
곳 : 군산미군기지 정문
주최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0654-465-5715)

▶ 대중강연회 — "현 정세와 우리의 나아갈 길"

때 : 7. 3(금) 저녁 7시
곳 : 숲정이 신협 3층
강사 : 박세길
문의 : 노동자 통일대 녹두 (0652-253-3569)

▶ 자원봉사자 모집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세요.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가정에서 여성·아동폭력 처벌받는다

7월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가 사회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방지법은 96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연대」 등 여성 및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97년 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게 됐다.

특례법안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의 즉시 출동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운동계의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한 선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법중 형법의 '폭행 및 상해의 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신고되더라도 경찰이 "가정사는 사생활"이라 하여 출동을 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미온적으로 개입해 가정폭력 문제는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법의 시행에 맞춰 다양한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여성전화(공동대표 하춘자·함경숙)은 6월 24·25일 여성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른 전북지역 여성 의식화 교육'을 실시했다. 7월 4일에는 전북여성운동연합 주관으로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시가지에서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여성운동 10주년을 맞아 전북여성운동연합(상임의장 이강실)과 그 회원 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재범 판단 근거없다"

과거 국가보안법 등 복역자들에게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

레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악법으로 거론돼 왔던 보안관찰법에 대한 폐지운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종환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7년 1월 박석삼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민성 씨는 91년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했으며, 보안관찰법에 따라 출소 직후부터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장 씨가 안기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고,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라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5년씩 복역하고 출소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도 6월 26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기사출처 : 인권하루소식 제1155호]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

-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 2) 가정폭력의 발견 (제5조)
 - 모든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이와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음
 - 피해자가 18세 이하 아동, 60세 이상 노인, 정상적 판단능력 결여자인 경우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대표에게 신고의무 부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 3) 현장에 공권력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피해자 보호와 폭력상황의 종식
 - 경찰관의 즉시 출동 및 개입
 - 가해자에 대한 임시적 퇴거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 가능
- 4)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 금지명령, 최대 6개월까지 격리처분 가능, 친권행사제한명령 등 규정
- 5)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 6)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의 보장
 - 가정보호처분 절차 참여권 및 보호처분 결정에 관한 의견진술권 보장
- 7) 재정의 부담
 - 피해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

파산한 나라, 무너지고 있는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 신축이라?

조문익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

끝내는 우리 고향을 결판낼 성장연합 세력들!

최근 우리 지역의 성장연합세력은 경기침체국면을 역으로 딛고 일어서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북지역의 개발은 사실 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소수의 대토주자와 이들이 걸려있는 소수의 건설개발업자,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부용직인들과 바랑잡기 언론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아니 강력하게 지역할거세력으로 뿌리박기 시작한 몇몇 재벌그룹의 힘에 세력으로서의 '성장연합세력'의 한 부분으로 빌붙어 세력을 유지하는 지역도호들의 움직임은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르고, 부수고, 망쳐가고 있음이 확실하다.

나는 지역의 텃밭있는 몇몇 식자들로부터 무주리조트와 무주유니버시아드가 어차피 결과는 비슷했겠지만 그럭저럭 명맥을 유지하던 지역기업 쌍방울의 목숨을 단축시켰으며, 무주지역의 선주민들을 생활공간으로부터 유리시키고, 도리어 외지인들의 땅투기만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듣고 가슴이 지린 바 있다. 또, 얼마전에는 새만금 어민들이 피해보상과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새만금이 아니면 죽음'을 주장하는 전라북도의 여론주도층이 과연 그러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 고민하고 느끼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성장이 진정으로 전북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강하게 치밀어오르는 의구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역의 낙후성을 얘기하며 월드컵으로 성장하자는 사람들!

갑자기 경기장을 신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래 증개축조차 국비지원을 전제로 유치신청하겠다는 월드컵 경기장 아니었던가? 그래서 월드컵을 유치하면 전라북도가 잘살 것처럼

렸던 그 사람들은 이제와서는 국제축구연맹에서 경기장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별수없이 신축해야겠노라고, 1500억을 들여서라도 이왕 유치한 축구경기 잘 치루어보자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듣는다. 우리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5명인가, 6명인가 그분들이 나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분들을 비롯한 성장연합세력은 월드컵을 유치하면 지역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관광도 많이 오고, 물건의 판매도 많아지고, 심지어 공사기간중 건설경기도 부양되고 실업자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말까지한다.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 경기에서 순이익 200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전북도민 모두가 10만원씩 벌게 된다는 사기는 치지 말자. 약간 비꼬아 말하면 그 2000억원을 버는 사업들은 건물주와 건설업자와 일부 숙박업자가 아닐까? 나머지는 그야말로 떡고물 정도 좇아먹는 지경일 것이며, 그것도 전주 인근의 극히 일부 주민들 아닐까?

유니버시아드를 위한 제반 준비가 무주군민중 일부가 외국인들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 말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듯이 월드컵경기장 또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차리리 그 예산이 있으면 1억씩 1500개의 중소기업에 지원하라!

그러면 적어도 1500개의 기업이 1년 동안은 망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보통 예산을 1500억을 잡으면 4년 뒤까지 2000억이 들지 2500억이 들지 모른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적 관료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삶의 노정을 통해 배웠다. 또, 유지비용은 얼마일까?

이번에 당선되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기는 4년이다. 2002년까지도 4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 전북지역의 단체장들께서는 이미 1년에 대략 500억씩을 부담하시겠다는 얘기시다. 특히, 전주시장께서는 1년에 적어도 200억, 많으면 250억씩 다른 예산에서 빼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예비비는 물론이고 사회복지비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미 2000억의 부채가 있는 전주시는? 특히 전주시장은 항상 강조하기를 전주를 '문화의 도시'로, '노인과 약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않았던가? 그런 사업만 하는데도 4년이 걸지는 않을 터다. 전임 시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았을 테니!

지금 전주시민을 행복하게 하자!! 전북도민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자!!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이 의미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있으면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필수불가결할까? 2002년이 지나면 월드컵을 한국과 전주가 다시 유치하게 될 날은 100년 이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월드컵경기의 경기장 규정에 맞추기 위해 전북지역 실업자수가 사실상 20만여 명이 넘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심각한 실업사태에 직면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1500억이나 되는 적지않은 돈을 경기장에 쏟아붓는 것은 참으로 과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1500개의 기업이 1년씩은 버틸 것이고, 적어도 50,000여명의 고용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전북도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혹자가 그렇게 소극적이어서야 어떻게 이 경쟁시대를 헤쳐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물을 것이다. 그 경쟁이 끝나고 난 뒤 무엇을 할 것이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하게 삶의 휴가를 즐길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자!"고 말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4 호

1998년 7월 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삼지사회관 ·전화) 0652-76-1253 ·팩스) 74-7486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준법서약은 제2의 전향제도

법무부, 양심수에 '전향서' 대신 '서약서' 받기로

사상전향제도가 준법서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더욱 교묘하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일 미전향 장기수, 납과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이른바 공안사범들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서면 서약을 할 경우 대사면·복권, 가석방 혜택을 주겠다고 하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서약 이후 담당검사가 서약서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방 이후 형식적으로 실시해 오던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며 "준법서약제 도입은 공안사범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준법서약제는 사상전향제도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중요함으로써 정부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인 양심수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곧 과거 '사상전향' 강요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장관은 "준법에는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혀 사상처벌법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임을 명백히 했다.

더불어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미서약(전향) 양심수들은 '빨갱이'나 안 쓰

는 것이다'로 단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격리될 소지가 커지게 됐다.

양심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해왔던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도'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가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법무부 방침에 대해 '또 다른 전향제도인 준법서약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 '양심수에 대하여 석방을 미끼로 서약서

를 요구하는 작태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이나 노태우와 같은 학살범, 비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경제인들과 달리 왜 양심수들에게만 이런 부당한 강요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히고 "전향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민청 공대위'도 유인물을 통해 "준법서약은 이는 과거 정권에서 비록 일부분이는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했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퇴보한 방침"이라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약법 철폐없이 국민의 인권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는 사상통제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있다. 여기에 한술 더해 국가권력이 인간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심지어 '침묵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바로 사상전향제도이다. 전향제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장관의 훈령이라는 '내규'차원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판단 또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행하고 있다.

전향제도의 뿌리는 일제가 1936년에 만든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한 데서 시작한다. 해방후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이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지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데 이때의 수가 모두 8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서도 안으로는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73-74년에 걸쳐 전국의 좌익수에 대한 살인적인 전향공작에 들어가 몇 사람이 고문으로 죽었으며 이후 비전향좌익수의 수는 200명 정도로 줄었다.

전향의 내용은 70년 중반까지는 대북비판 등 강도높은 전향을 요구했으나, 이후 반유신투쟁이 거세지면서 정치범의 수가 늘자 장기수 외의 사상범에 대해서는 '반성문', '각서'등의 '준법서약'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98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는 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주, CCTV로 다섯명 해고

지난 3월, '벤츠 가렸다' '수상하다' 등 이유

CCTV를 이용 버스기사의 행동을 감시한 뒤 해고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버스회사들이 해고사유로 든 내용들이 명백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이 못돼 CCTV를 이용한 횡포가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떻게 감시하는가

전주 소재의 안전여객은 지난 3월 세 명의 기사를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고했다. 이 중 한 사람은 종이컵으로 카메라 렌즈를 덮었다는 이유로 해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시외버스 내부를 녹화한 비디오를 관독한 결과 버스승차권만 있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측은 그가 현금은 가로챘 것으로 '민었다'. 운전석에서 신문을 펼쳐 환전통을 가렸다는 이유로 다른 한 사람이 해고됐다. 이들은 모두 CCTV에 '확실히' 찍혔지만 정작 이른바 '뽕뽕'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풍남여객도 두 명의 기사를 해고했다. 요금통 환전기에서 100원 짜리 동전 세 개를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 이들을 해고한 유일한 이유였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려 간 이들은 "그렇게 남의 돈을 왜 만졌느냐"며 오히려 이들을 타박하는 말만 듣고 나왔다.

한편 모 직행버스 회사에서는 버스에 타고내리는 승객수와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350원이 부족해 1차 경고를 받은 기사도 있었다.

CCTV 설치하는 지난해 하반기에 노동조합 지도부와 회사측이 연 '노사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CCTV 설치 이후 각 버스회사에 따라 3천원에서 1만 1천원까지 구체적인 명목을 지정하지 않고 일일 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기사들은 이 수당을 '뽕뽕수당'이라 부

르고 있다.

버스기사들은 어떤 심정인가

전주 소재 모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기사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으면서 늘 강박감과 심리적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CCTV가 없을 때보다 훨씬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며 각종 신경증을 호소했다. 또 많은 버스기사들이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은종일 쬐게 되어 어는새 목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두통·나른함·기억상실·뇌암·백혈병 등을 유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X선·감마선 등의 방사선·자의선)을 가지고 있다는 논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용공학교실)도 발표되어 CCTV가 인체에 미치는 해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CCTV 무엇을 찍는가

97년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에서는 한 군데의 버스회사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외·시내버스 안에 CCTV가 설치되었다. 호남·신성·전일·제일·풍남여객 등 5개 시내버스 회사와 전주·안전·대안여객 등 3개 시외버스 회사가 모두 CCTV를 설치했다.

CCTV는 버스기사들의 이른바 '뽕뽕'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어 버스기사, 그리고 승객들의 타고 내리는 행위를 버스운행 시간 내내 촬영한다. 또한 주행중이라도 13~15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지역 버스회사들이 설치한 모든 CCTV가 음성녹음까지 가능해 승객들의 사적인 대화까지 담을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시외버스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맨 뒷자리 승객까지 렌즈에 포착할 수 있게 버스 안쪽을 향하고 있다.

전북지역 버스기사들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 동안 1900원에서 2300원까지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평화통일열원 시국강연회

때 : 7. 14(화) 오후 2시
곳 : 전주 금암교회(KBS맞은편)
강사 : 김근테·박종화

(양심수 가족과의 간담회
-저녁7시 고백교회)

▶ 천주교사제단, 양심수석방운동

천주교천주교구정의구원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이 20개 성당에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입니다'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걸었다.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검찰자백이라도 임의성 없으면 증거 안채

지난해 9월 부산 '동아대 간첩단 사건'에 대해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학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백 내용도 객관적 상황과 주요 부분이 들어맞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며 "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

여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 등은 94년 3월 한총련의 지시를 받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받아 귀국한 뒤 학교 후배 엄씨 등을 포섭해 국내 학생운동권의 동향을 조총련에 보고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처음부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사 왔다. 가족들과 변호인측은 안기부·보안수사대가 사건 조사를 위해 50여일 동안 고문과 가혹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가족과 친지 심지어는 약혼자에게도 회유와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배씨가 조총련에게 공작금을 받았다고 배씨 통장계좌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관련계좌가 없었던 점도 조작의혹을 뒷받침했다. 또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당원서가 없는 점 등도 조작의 근거로 주장했다.

"진보운동단체 탄압말라"

진보민청 이적규정에 사회단체 공동대응

진보민청총련연합(진보민청)에 대한 이적규정을 반박하면서 사회운동단체들이 조직적인 대응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정치연대), 국민승리21,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인천민중연대협의회 등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은 「진보민청 침탈 대응 및 이적단체 조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오세철, 김영규, 홍근수, 양연수)를 만들어 최근 정부의 노동·청년단체들에 대한 잇단 이적규정에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대표자회의를 갖은 자리에서 각계 단체들은 "김대중정권이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공동위는 '진보민청 이적단체 조작수사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500인 선언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조세형 국회의 총재 권한대행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공동위는 7월 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고, 진보민청 이적단체 규정의 부상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 투쟁기금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7-21-0345-740 (김수자)

■ 감옥에서 온 편지 ■

(대전교도소에서 김성만)

[편지자주] 이 편지는 대전교도소에 14년째 수감중인 김성만 씨가 월간 「작은 책」 7월호에 실은 편지의 일부입니다.

징역 속에서는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똑같은 일상만을 되풀이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반년이 지나가 있고, 또 문득 생각해 보면 일 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 마흔셋이란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른살에 들어와 십삼 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셈이지요. (중략)

그 모든 것에 앞서 제가 진정으로 그리운 것은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다른 많은 양심수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저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사정권이 우리를 가두어 놓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을 지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 사면에서 제가 제외되었을 때 크나큰 절망을 느꼈지요. 그때 저는 희망이란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근원에서 오는 힘의 원천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웃을 때조차, 웃는 것이 다 무언가,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문민정부'에서도 감옥문이 굳게만 닫혀 있었지요. 그 문민정부 내내 감옥 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양심수 문제에 긍정적인 '국민의 정부'도 국민의 여론을 살펴 보면서 감옥문을 시원하게 열지 못하더군요. 지난 3월 사면이 있던 날 우리는 모두 나가는 줄로만 알고 집까지 다 왔다가 도로 풀었습니다. 감옥살이에서 집 왔다가 푸는 것처럼 허탈한 일은 없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양심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양심수들이 자유를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8. 6. 4.

김성만 드림



권리를 통한 권력의 분배가 가정과 사회를 인간화한다

윤 찬 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옛날 이야기 한토막을 소개한다. 북극 탐험대가 1박 2일을 쉬지 않고 북쪽을 향하여 달렸다고 한다. 어느 지점엔가 도착하여 잠을 자고 나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더니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탐험대가 딛고 있던 거대한 빙하가 밤사이 남쪽으로 떠 내려 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겁고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힘을 비교하면 사회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사회구조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한다. 따라서 구조적 변혁없이 개인들의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권리'

그런가 하면 사회란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가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또한 바뀌어 가는 것도 개인들의 어떤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겉보기에 소수의 개인들이 사회의 유지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권력이라는 경제적 권력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적 개인들은 권력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도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권리인 것이다. 물론, 가진 자 내지 지배자에게도 권력의 행사에 명분을 실어 주는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도 일정 부분 권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인들의 권리가 집합적으로 존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그것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

가정에서 가장 취약한 입장에서 있는 존재는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등이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보호막(?)으로 위장된 채 학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리를 통하여 권력이 분배 내지 재분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확보해 내고 실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가정 내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적인 문화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보다 훨씬 밀착되어 있는 관련성 속에서 어른이 아이들을 또한 남성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인 민주화는 가정에서의 민주화보다 훨씬 진척되어 있는 터라 반정부적 언행이 과거보다는 덜 비난 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부모나 남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여전히 패륜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 가정 내에서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남성이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폭력을 수반하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힘 얻어

가정에서 가장 취약한 입장에서 있는 존재는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노

인,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등이다. 게다가 그들이 장애인이라면 더욱 열악한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들은 가정이라는 보호막(?)으로 위장된 채 학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성폭력을 포함하여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은 그 동안 소위 숨겨진 범죄(hidden crime)로 인정되어 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잘 못했다고 판단될 때 체벌을 가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선진국에서 대개 20~30%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의 어머니들이 체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부부 간의 폭력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경우 10% 대에 머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30% 이상의 부부가 1년에 1회 이상의 부부간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남성에 의한 폭력이 여성에 의한 폭력에 약 3배 정도에 이른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내 약자의 권리 보호막 될 것

이제 이러한 가정 내 폭력에 대해 법의 준엄한 철퇴가 주어졌다.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자 가정 내에서의 약자인 이들에게 폭력적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전하고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의 힘이 주어 진 것이다. 그 동안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적 행위로 간주되어 오던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약자들에게 권리라는 정당한 권력을 보장해 줌으로써 일방적 학대와 폭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사회를 억압하는 불평등한 권력구조는 권리의 확산과 분배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5 호

1998년 7월 13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순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76-1253 ·팩스) 74-7486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노조지도부가 정리해고 들먹 군산 기아특수강노조, 선거 앞두고 조합원 협박

기존 노조집행부가 회사측과 유착, 정리해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협해 집행부를 재장악하려 시도하고 있어 노조민주화 세력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기아특수강 노동조합(군산 소재·위원장 이정석)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를 앞두고 타후보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회사측과의 유착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기아특수강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2%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고, 다음날 노조 위원장은 대의원간담회에서 "정리해고 없게 하겠다. 막아내지 못하면 최소화라도 사기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특수강 노동조합은 예초 9월로 예정된 임원선거를 7월 15일로 앞당겨 치루기로 하고 현 이정석 위원장과 박형순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후보등록추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은 "추천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의 우선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해 조합원의 90% 이상에게서 추천을 받았다.

"지지 않으면 정리해고 될 것"

임원선거 등록 마감일인 7월 4일, 노동조합 선관위는 상대 후보인 김상배-권태균조합원이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하려 하자, 이들을 추천한 조합원이 202명임을 확인한 뒤, "단일추천자는 65명 뿐이고, 중복추천자가 137명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회사와 합작품

김상배-권태균후보진영은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의 등록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후보등록추천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부당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항의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김후보 측은 특히 회사 측이 여러 공식조직을 통해 기존 노조집행부를 돕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특수강 민주노동자회」 조성옥 씨는 "경영진의 비민주적 작태도 문제지만, 노동자들의 밥줄을 이용해 자신의 안정과 영달만을 꾀하는 소수 노동 귀족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기존 집행부를 규탄했다.

[인권간행물] 양심수후원회 소식

10년 동안 양심에 호소해 온 작은 햇불

흔히 소식지 하면 소속 회원들 외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단체의 소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의 <양심수후원회 소식>이다. 여기에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의 소식뿐 아니라 감옥에 아버지, 남편, 아들, 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생생히 담겨 있다. 또한 많은 조작사건이나 고문 등에 대한 당사자의 진실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또한 출소한 장기수(양심수) 선생님의 생활상이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후원회소식>은 해마다 3·1절이나 8·15만 되면 잠깐 떠들썩하다 이내 잊혀지곤 하는 양심수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하게 한다.

<양심수후원회>는 10년 전 15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1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족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회의 활동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이다. 영치금 보내기에서부터 양심수가족 돕기, 양심수에게 지속적인 편지쓰기, 출소장기수의 생활지원과 건강관리, 그리고 헌신적인 양심수석방 캠페인 등 <후원회>의 10년은 실로 경이롭다. 지난 5월 <후원회>의 10주년 총회에서 지난 3월에 석방된 장기수 김인수(76세) 씨는 "후원회의 손길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소생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구독문의 02-763-2606)

“한국 현실 가슴아프다”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장기수 '무조건 석방' 촉구

한국정부가 '준법서약'을 제도화하려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유력한 단체들이 한국의 양심수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명예의장으로 있는 진보적인 변호사 단체인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는 지난 5월 중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ADL '98 임원 회의에서 한국의 장기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 초순경 결의안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탄원서에서 IADL은 “석방조건인 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장기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가슴아프다”며 “한국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모든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ADL은 또 “장기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은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국제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지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의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위원회」(ICPRK)와, 95년 초부터 ‘한국의 장기수 석방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도 한국 장기수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역시 세계적인 ‘국가보안법’

외국단체들, “진보운동 탄압말라”

진보단체들에 대한 공안세력의 무작위 수사와 마구잡이식 탄압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외국 진보단체들의 연대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진보민청 침탈 대응 및 이적단체조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 권영길, 김영규, 양연수, 오세철, 홍근수)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의 반파시즘과 반제국주의 운동단체인 「Arm The Spirit」(정신을 무장하라)가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정치범을 양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스페인 학생운동단체인 「Spanish Students Union」(스페인 학생연합)도 연대메시지를 보내와 “그동안 동남아시아는 저임금, 노조권리의 부재,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발전의 본보기가 되어왔으나, 현재 ‘본보기’는 붕괴되었고 노동자 계급이 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의 관계를 맺자”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새 소장 김정제 씨 부임

지난 1일 법무부 인사에 따라 마산교도소장 김정제 씨(56세)가 전주교도소 새 소장으로 부임했다.

김 소장은 부임 인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나, ‘수용자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소장은 ‘재소자 3대 의식개혁운동’인 책읽기 운동, 고문말쓰기 운동, 서로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3대 의식개혁’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소자들의 짧은 휴식 시간에도 강행되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고용실업대책추진 거리서명

때 : 매주 금요일 오후 5-7시
곳 : 외환은행 앞
주최 :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 양심수전원석방추진 거리행진

때 : 7. 14(화) 오후 4시
곳 : 금암교회~코아백화점

▶ ‘꽃다지’ 콘서트

때 : 7. 24(금) 오후 7시
곳 : 전북대 합동강당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반민중적 구조조정 안된다”

양대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돈많은 사람들 보살피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한 고용분담’을 주장하면서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걸어온 이들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양대노총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망친 재벌총수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버젓이 소유·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신, 노동자에게만 고통전담이 강요되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노사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노사정의 대등한 사회협약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총체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없이 11개 공기업 민영화와 5개 은행 퇴출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노사정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서 “강제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퇴출은행·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탈법적인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고용·실업대책을 수립하며, 노사정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특위에 상정된 63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약력 기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97년 집회 때보다 훨씬 많은 8만여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반민중적 구조조정 중단 △민중생존 팔아먹는 공기업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외면말라”

고용실업대책본부, 매주 금요일 거리서명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는 7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7시까지 전주시 외환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10만 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구제금융 9개월 재를 맞아 전라북도의 실업자수가 2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3-6개월간 24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생계지원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직장을 얻을 때까지 봉급자의 50% 수준(60만원)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10만인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실직자 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서명 두 번째 날인 이날 시민들의 반응은 처음 거리서명 때보다는 좀 더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운동본부 활동가들의 설명에 이끌려 서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묻지도 않고 두말없이 하는 사람, 바로 자기의 일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서명하고 천원짜리 지폐도 후원함에 넣어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거리서명은 실제 시민들이 실업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이 드신 아주머니 아주씨들의 관심에 비해 젊은이 중 많은 사람들은 실업문제를 아직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 했고, 심지어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계속될 거리서명운동이 IMF와 실업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꾀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운동 정보화 눈앞

진보네트워크, 내달부터 본격 활동

자신의 변변한 통신수단이나 네트워크 수단을 갖지 못하고 상업적 통신망에 의존해 온 운동단체들이 독자적인 진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지 주목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출범식을 갖고 시민사회운동의 공동네트워크를 구축, PC통신,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정치연대, 국민승리21, 노동자 뉴스제작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녹색연합, 참세상 등 국내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중이다.

소통(커뮤니케이션), 공동체(커뮤니티), 정보(콘텐츠) 등 3C를 표방하고 나선 이 센터는 노동, 여성, 예술, 교육,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를 한데 모아 국내의 시민사회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포부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전화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메일링 리스트, 뉴스그룹, 전자우편, 게시판, 포럼 등 기존의 상업 PC 통신망에 비해 손색이 없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파하는 ‘인터넷 방송국’과 민중가요, 영상·사진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사회’, 권력의 부당한 검열에 맞서기 위해 문서보안 프로그램(PGP)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진위 측은 또 개인의 네트워크 참여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현재 ‘1만 발기인 모집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부문 네트워크인 한국노동네트워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발족식을 가진 한국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노동단체들의 연대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교육현안을 짚어본다

정인섭(전주 해성고등학교 교사)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일선학교들의 분위기는 내가 겪은 군대생활과 비슷해보인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란 허위통계보고에 거짓실적과 임시방편들이 난무했다. 입시제도개선이 교육개혁의 중심기둥이므로 입시제도가 바뀔에 따라서 그 밖의 문제점들이 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입시제도개선이 간단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사실 곱돌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교육현실의 문제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문제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고 장학하지 않고 감독과 지시로 일관하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공문서가 최근에 더 많이 접수되고 있고(하루 20여건)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에 매달리다 보니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자습시키고 일에 쫓기는 예가 허다하다.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이 동일한 보고를 중복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교육개혁실적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의 경우는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 아닐 수 없어 쓴웃음을 짓게 한다. 교육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방과후 교육활동문제

전에 보충수업이라고 불렀던 방과후 교육활동은 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희망학생에 한해 희망학과만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특보반(고급수준학생들을 특별히 조직한 반)을 위한 수업도 공공연히 운영하고 있다(일부 고등학교에 해당함). 다양한 자율학습이라 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선택된 분야별로 특별활동을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일선학교들의 분위기는 내가 겪은 군대생활과 비슷해보인다.

하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실내독서활동으로 대체되고 있는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하겠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며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야간자율학습문제

전북지역의 고교생 학력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우리 도의 도세가 열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본인 희망여부와는 상관없이 야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후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서울의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 전국이 비슷한 실정이라는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은 여러가지 폐해가 얽힌 문제여서 반드시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당초에 집에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공부할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학부모들과 학교가 미묘한 협조관계가 맺어져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학부모는 집안에 자녀를 두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심리 때문에 일단 학교에 맡기려고만 드는 실정이라서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시키고 있

는 셈이고, 학교로서는 타학교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급박함으로 교육효과나 학생에게 발생할 폐해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이번 학교부터 전주 시내 몇몇 학교는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만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참여케 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는 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해로는 학생들의 의무적 참여로 인한 불만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흐름이 야행성이 됨으로써 오전시간에는 흐린 정신으로 다수가 졸린 상태였다가 오후 늦게부터 머리가 트이게 되어 학습효과가 예초 의도와는 달라진다는 점이 있고, 가정교육에 소홀하게 되어 예외범절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피동적 수동적이 되어 장기적으로 불투명 부작용이 역기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

공립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심리와 공립학교당국, 그리고 해당학교 졸업생들의 움직임으로 최근 평준화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행 고교입시제도도(전주시의 경우) 준평준화해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선3개교지망, 후추첨인데 이미 정해진 서열에 따른다는 감이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해제될 경우 입시지옥의 방향화는 뻔한 일이고 교육의 파행은 견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밖에 교육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선대상들은 여럿이 더 있었으나 핵심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얽힌 문제들이고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상일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6 호

1998년 7월 2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76-1253 ·팩스) 74-7486
·통신D) onespark(전.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전북노동자, 파업·도지사에게 항의서한 전달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산하 400여명의 노동자들은 15일 오후 3시 코아백 화점 앞에서 '강제구조조정 저지·부당노동행위 척결·정리해고 중단·고용안정 쟁취 전북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종근 도지사에게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의보노조 전북본부와 금속연맹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문정현 신부(재벌개혁 IMF재협상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파업지지 연대사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과거 국내재벌 키워주기 정경유착에 다름아닌 국제재벌 키워주기 더러"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만을 위한 노사정위를 탈퇴해야 마땅하고, 노동자의 목만 자르고 소수 자본에 더 많은 부를 얹어 주는 형태인 현재의 구조조정을 우리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도마에

"강제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5개 퇴출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의 결의문을 외친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거쳐 전북

도청사 앞에 집결해 유종근 도지사에게 현재의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날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안

중에도 없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며, 이를 '공공성을 담보하는 민주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자칭 '시장지상주의자'인 유종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의보노조 전북대병원지부는 15일 새벽 5시 단협이 성사되어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집회에 전원 참석해 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위기의식이 고조돼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 권위주의 회귀 우려”

국제사회, 파업진압 관련 한국정부 비난

국제노동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체포 등 파업관련 탄압에 대해 17일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앞서 14일 국제사면위원회(AI)가 파업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국제자유노동연맹(ICFTU)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노조자문기구(TUAC)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노동단체들의 보고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국제 노동 규준들을 어김으로써 전임자들의 관행들로 복귀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들,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년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에 따른 것과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조치들에 관해 노동조합들과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충고했다.

ICFTU와 TUAC는 또한 "한국 지부로부터 한국정부가 금속산업연맹의 노조지도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45명의 노조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세 명의 노조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국제자유노련은 141개 각국 지부에게 한국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국제사면위원회(AI)도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실직여성노동자들과 같은 가장 취약한 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시위와 파업을 탐탐하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은 개방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한 항의 형태"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소위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의 정당성은 없다"고 밝히고 "대규모 전투경찰을 동원한 강경진압은 충돌과 구속, 그리고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산, 전국 폐기물 처리장 될 판 환경부, PCB 실험소각 체비

「군산환경시민회의」, 「군산사랑청년회」,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등 군산지역 15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환경호르몬 PCB(폴리염화비페닐) 및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이세현·문성주·전병호) 회원 50여명은 15일 '군산환경관리공단'을 항의방문해 5시간 동안 농성을 했다. 이는 환경부와 군산환경관리공단이 군산에 있는 특정 폐기물 처리장인 '군산 공공처리장'을 전국권 처리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게다가 환경호르몬 물질인 PCB(폴리염화비페닐) 지정폐기물을 반입해 소각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군산 시민들은 호남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군산에 건설하려는 환경부에 맞서 싸운 결과 전북권 처리장으로 국한하여 설치하게 되었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대표, 시민대표가 합의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군산공공처리장을 전국권처리장으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계속 진행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민지역협의회(92년 '호남권 산업폐기물 시민대책위'가 변경된 조직)의 일부 위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산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소각로 시험가동으로 환경호르몬 물질인 PCB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PCB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소각처리시설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도권 처리장인 화성사업소에서 지금까지 보관중이었다. PCB는 소각처리과정에서 불완전연소되면 다량의 다이옥신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산지역 '범시민대책위'는 군산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해 ▲전국권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군산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PCB 시험가동 소각처리 중단

▲감시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에 동조한 주민지역협의회 위원 사퇴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계자를 처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직교사도 준법서약해야?

교육부가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는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선별복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직교사 복직 문제는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 때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전교조 활동' 관련으로 해직되어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한 해직교사들(149명) 중 교단 복귀를 희망할 경우 '98학년도 2학기부터 특별채용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직교사가 '전교조 탈퇴' 대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만 교단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 탈퇴서 대신 요구하고 있는 준법서약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명시된 '공무원 취임시 성실의무 이행 선서' 절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준법서약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또 다른 형식의 각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교사 이외에 이번 교육부 방침에서 제외된 미복직 교사들은 시국

관련 해직교사 18명, 사학민주화 운동 관련 해직교사 110명, 임용제외자 75명 등이다. 또, 전교조 해직교사 중 해직기간 동안 사망자도 9명에 이른다.

【 행사와 동정 】

▶ 정보통신연대INP 2기 출범

전북지역에서 정보통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단체 중 하나인 '정보통신연대INP'가 상임대표에 문규현 신부·대표에 전희식 씨를 선출하고 2기를 출범시켰다. '정보통신연대INP'는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고, 작업장 감시로 인한 노동인권침해문제에 대응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연대INP 인터넷홈페이지 - <http://inp.or.kr>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양심수가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

전원석방촉구 집회

전북지역에서도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14일 저녁 '양심수 가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양심수 석방촉구 집회에서는 손병선 씨의 동생 손외순 씨 등 양심수 가족들이 참석해 양심수 석방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전주 금암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 정부 들어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800여명의 참석자들이 양심수 석방을 애타게 호소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는 참석자들의 양심수 전원석방 요청에 대해 "지켜봐달라" "참고 기다려보라"고 답했다.

현재, "불고지죄 합헌"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억압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비난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재임용 결정권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사립학교법(53조의2)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복역중인 황인오 씨의 어머니가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판결문에서 "불고지죄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남북 긴장관계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말만 할래도 눈물이 난다"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돼 무기형을 선고받고 오는 10월로 만 6년째 복역하게 되는 손병선(61) 씨의 동생 손외순(56) 씨를 만났다. 손씨는 지난 14일 아침에 전주교도소에서 손병선 씨를 면회하고 저녁에 고백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편집자주]

1. 손병선 선생은 왜 구속됐나?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을 극구 막고 대북 창구를 단일화했다. 어려운 민간 통일운동을 하다 구속됐다. 북한 서열 22위라는 거물 이선실을 만났다며 간첩죄를 썼다. 그가 도망친 건 잡지 못하고 오빠 같은 사람은 왜 가렸는지 모르겠다. 오빠 말로는 이선실은 당노가 있어 걸음도 잘 못 걷는 사람이다. 그가 강화도를 통해 수십번이나 오갔는데 말이 안된다. 수표는 추적하기 쉬운데 이선실은 수표를 건네주고 다녔다. 사건의 진위 여부도 의심스럽다.

2. 사건 뒤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원래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내가 수배생활 7개월 만에 담도암으로 죽었다. 치료시기를 넘긴 것이다. 뒤이어 아버지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애들만 남아서 지아버지가 임대로 하던 화훼농장이라도 계속해 먹고 살려 했는데 일꾼들을 써야 하는데 기관에서 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좋지 않다. 자식을 직장생활 못하게 하려면 같이 일해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니 할 수가 없다. 그래 먹고 살 길 없어 형제가 다 빨뿔이 흩어지게 됐다.

3. 오늘(7. 14) 면회 때 무슨 얘길 했나?

석방에 대한 희망은 다른 때보다 많다. 그래 이번에 서약서라도 쓰고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 의면하고 혼자 나갈 수는 없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나가 뭐하냐며 같이 나갈 수만 있다면 서약서라도 쓰겠다고 말했다.

4. 소장이 바뀌었는데 달라진 점이 없던가?

전 소장이 있을 때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특별면회 했고 어제도 미리 전화해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막상 내려와서는 일반면회밖에 못했다. 오빠는 내가 실수로 특별면회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어리둥절했는데, 실은 교도소측에서 "지난 일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할 수 없었다. 특별면회 못하게 없앤 점이 달라졌다.

5. 손선생께 한약을 지어 보낸 것을 교도소에서 안받아줬다는데...

오빠가 C형 간염으로 6년째 앓고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해 간경변이 될까 걱정이다. 소포로 여러 번 한약을 지어보냈는데 교도소에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했다. 할수 없이 내버리고 말았는데 교도소에서 약값은 변상해 주더라.

4. 석방운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오빠한테 뇌성마비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제일 목매어 한다. 이야기하자면 구구절절이 마음 아프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애들이 집도 한 칸 없으니 다 념의 집에 빨뿔이 흩어져 산다. 뇌성마비 아이는 사회단체에 의탁해 있다.

인권 주평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시장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전쟁 - 조문익(민주노동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

지난 15일, 민주노동 전북본부의 파업집회대오는 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마친 뒤 유종근 도지사에게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포기할 것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구조조정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유종근 도지사가 부재중이어서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날 함의서한의 전달은 전북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전북도민이 '시장주의자' 유종근도지사를 지지했다고?

최근호 도정신문에는 유종근 도지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된 것이 그동안 유종근 도지사가 외쳐온 '시장주의'와 '외자유치'에 대한 전북도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는 분석기사가 실렸다. 물론 그것이 도정신문이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분의 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관료무리가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싶어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종근 도지사가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것은 우선 '국민회의' 후보인데다 단일후보였고, 정상적인 의미의 찬반투표조차 아니었던 탓이다. 유종근 도지사의 지난 임기기간의 공과가 판별될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외에 깨끗한 정치적 이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단히 신임받는 듯한 모습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표방하는 '시장주의'에 대한 지지라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이다.

반론이 없다는 것!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

유종근 도지사는 평소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며, 구조조

민주주의의 끝에는 인간 존엄성이 있으며, 시장주의의 끝에는 이윤이 있으므로, 만약 진정한 시장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한다.

정과정에서 일부(?)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며칠전 한겨레신문에는 전국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가 실업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실업자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어찌 유종근 도지사 탓이라고만 할 수 있으랴. 그러나,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퇴출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느슨해지기 마련이고, 자연히 이에 영향받은 각종 기관들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라는 추측마저 불가능할까?

전라북도에는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 위에 서있는 독재정권이 들어서 있다. 농림부가 공단조성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달려가 항의하는 유종근 도지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전북도민들을 보라! 바로 며칠전 전남 무안군-목포시 일대의 매립사업이 전면 유보되었다. 환경파괴를 우려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채만금개발에 대하여 반대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영향력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있었나?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은 99%이상의 확률이라는 점에 대부분이 공감하거나 우려를 표명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주류의 의견은 명확하다. 신문과 방송의 논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종근 도지사야 마찬가지로 '개발만이 살길이다'고 주장한다.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은 결국 자본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논리!

유종근 도지사 등 개발론자 =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은 결국 '경쟁력 없는 놈은 죽이고 힘있는 놈만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해있다. 그래, 자본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그러한 '경쟁력'이라는 기준이 사람의 생명에도, 생존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적용가능한 것일까?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것조차 이익여부를 생각하면서 진행된다면 사실 기계보다 나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구조조정이 설사 옳다하더라도 반론하나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무식이 판치는 '여론망'이라면 그것이 군사독재시절의 감시망과 무엇이 다를까?

유종근 도지사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마치 민주주의와 시장주의가 통일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 둘은 양립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끝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으며, 시장주의의 끝에는 이윤이 있으므로, 만약 진정한 시장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걸치려로 걸고 있는 시장주의자가 결국 자본의 성장만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것이 시장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근본적인 전쟁이 필요한 이유이며 민주주의자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하는 근거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7 호

1998년 7월 27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정리하고 노동자 7명 구속

현대(주) 전주공장, 해고에 고소고발 남발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48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고소해,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회사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8명의 조합원을 고소해 이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

지난 21일 오후, 버스 3대를 나누어 타고 울산집회에 참가하려던 98명의 노동자가 김해와 양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위원장 문용회)이 회사의 휴업조치에 맞서 이날 오전 10시경 출근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인 강모(34)대리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사무실 집기 수십 만원어치가 부서지는 충돌이 벌어졌다. 김해와 양산경찰서가 집회 참석차 떠난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속된 7명에 대한 고소장이 완주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98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어 간 시간보다 1시간이나 앞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자본 요구대로

또한 민주노동 전북본부 염경석 의장 등 완주경찰서 항의방문단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98명 가운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90명을 7시간 동안 구금한 것도 일방적인 경찰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자 500여명은 사내에서 규탄집회를 마친 뒤 완주경찰서 앞에서 불법연행과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기물파손과 폭행 등 혐의로 24일 구속된 7명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활동가들이므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측에 따르면 전체 3200여 전주공장 직원 가운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248명도 대부분 현장집회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에 지지를 보낸 노동자들이다.

지난 24일로 14일째 사측에 대항해 집회와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이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에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철퇴! 구속노동자 석방!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북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진 500여명의 노동자들은 "가정파탄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무단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장기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이날 7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구속자 가족과 노동자들의 농성 및 투쟁이 더욱 절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무력화 속셈"

문용회 노조위원장은 "올 4월 초 수천만불어치의 버스 제작 주문을 받아 놓고 있는 전주공장이 24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작태"라며 "어수

선한 틈을 타 노조를 무력화하고 활동가들을 제거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사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 전북본부 염경석 의장도 "15일, 협상단과 마주앉은 회사측이 같은 시간에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전북지역 1만5천 민주노동자와 함께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 전북본부는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노동조합원 98명 연행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 "눈엣가시 같은 대의원·소의원 등 현장활동가들을 보기 좋게 잘랐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한 노무관리담당자들이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웃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대자본의 주구(走狗)가 되어가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도 22일 성명을 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에 대해 탄압의 칼날을 거두고 가시적 고용실업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인도적 차원 석방' 옛말

준법서약제도 도입 - 사상전향제 강화

정부가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양심수는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41년째 수감중인 우용각씨(69·대전교도소) 등 비전향 장기수 17명은 준법서약을 거부할 경우 이번 8.15 특사에서는 물론 앞으로 석방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비전향 장기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일부 석방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7월 24일 법무부는 사상전향제의 근거가 됐던 공안사법교화요강을 개정해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 △생활계획서 등을 쓰게 하는 이른바 준법서약제 시행에 들어갔다.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사상전향서처럼 내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행동에 대한 약속"이라는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사상전향제의 변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가협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28일 변호사와 언론인,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중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는 437명 양심수에 대한 조건없는 전원석방과 대대적인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결성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창립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 "광복 50주년이 되는 금년 8.15를 앞두고 정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이어 "또한 준법서약을 한 사람은 '석방'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석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과거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는 "중전의 반인권적인 정권 시절에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과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새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주의법을 없애는 법적·제도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속보이는 공안정국

울산, 구청장 포함 조직사건

"사정있는 조직사건"

AI, 공안탄압 중지 촉구

울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반대 투쟁 등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울산 지역의 진보적 노동단체회원과 사회단체,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된 데 이어 23일에는 민선구청장인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이 긴급연행됐다. 경찰은 '한민전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수

의 시·구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김창현 구청장 및 사회단체인사 용공조작사건 범울산시민대책위원회」(울산대책위)는 그러나 부산시경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반론을 펼치면서, 이 사건이 당국의 의도적인 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이 조직의 성격을 한민전 영남위원회로 규정한 데 대해 울산대책위는 "한민전은 정부의 공식발표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미 그 실체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선전기관으로 규정한 한민전을 이번 사건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대책위는 또 경찰이 청년단체인 '희망의 젊은연대'를 '한민전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으로 규정한 데 대해 "개혁적 포럼을 지향해 창립한 '젊은연대'는 준비위원회 창립 당시 심원구시장과 김성렬시의장 등 각계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총회를 진행했으며, 활동내용은 울산항토사기행, 자연정화캠페인, 양담배추방운동 등이고, 활동을 하다 해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외에도 '노동절 행사 때 선전물을 배포해 반국가활동에 동조',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북한동포돕기운동 모금행사를 벌였다'는 수사결과도 내놨다.

울산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정국과 관련한 완전한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AI)는 22일 피에르 썬네(Pierre Sane) 사무총장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의서한과 성명서에서 AI는 "노조의 파업과 시위를 친북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정권이 반체제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수법인데, 이러한 관행이 인권존중을 서약한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도 폐지!
양심수 전원 조건없는
석방·사면·복권!**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①:

실직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편집자주]

이 글은 전북여성노동자회와 호남사회연구회에서 98년 5월 26일에서 6월 13일 사이에 전북지역의 실업자(66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남춘호 교수(전북대 사회학)가 분석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북(전주 284명, 이리 175명, 군산 201명/ 남성 463명, 여성 197명)지역 지방노동사무소 구직신청자(410명), 공공근로사업 참가자(180명)를 주로하고 재취업훈련생(70명)을 포함시켰다.

분석은 IMF초기의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다가오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전북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전북지역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동향, 실업자 동향 등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업자들의 실직 전후 상황과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실업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실고자 한다.

1. IMF체제하 전북의 고용동향

우리나라는 재발위주의 경제성장 이외에도 지역불균등발전을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한다. 그 결과 각 지역의 경제구조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당연한 결과로 지금의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의 두드러진 특성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은 가운데 영세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전라북도는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의 정상조업율은 98년 3월에는 67.7%까지 추락하였다. 지역불균등 발전 정책의 기초하에서 전북지역은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결과 지역경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오늘의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동향은 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

전북지역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만 8천명(2.3%) 감소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여성의 전연령층과 남성 60세 이상층에서 감소했다. 여성과 남성 노령층은 경기악화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더 이상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실망실업자라 하겠다. 그러나 9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51.6%에서 60.6%로 높아졌다. 이는 가장의 실업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들자 다른 가족원들이 구직활동에 나섬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농림어업 취업자가 9만 5천명에서 22만 7천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경제위기에 직면해 타 산업의 잉여노동력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3.7% 감소하였다. 특히 남성 저연령층(29세 이하)과 고연령층(60세 이상), 그리고 여성의 전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그러나 98년 1월에서 4월 사

이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자영업주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근로시간별로 보면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감소했다.

실업동향은 97년 1/4분기의 3.3%에서 98년 1/4분기에는 4.8%로 증가했다. 특징은 남자 15세-29세의 실업률이 월등히 증가한 점이며 여자는 실업대란으로 인한 구직단념자가 늘어 15-29세의 실업률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0.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0-59세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2.1%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급가족종사자가 급증하고 농림어업종사자가 늘어난 데서(계절종사자이기 때문) 보듯이 잠재실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한 실망실업자나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불완전취업자 등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다음호에는 '전북지역 실업자 실태'에 대해 나옵니다.)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 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와 지역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인권
주평

양심수란 무엇인가?

김승환(전북대법대 교수)

얼마 전 집권당의 인권위원회에서 폐긴 설문지를 보내 왔다. 그 속에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양심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순간 내 머리 속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팽 돌았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일까, 아니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어 양심수를 석방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자신들의 정답은 마련해 놓고 그러저러한 사람들을 둘러리로 세우기 위한 것일까……?

“누구든지 생각한다는 것을 이유로 처형될 수는 없다.” (Fürs Denken kann niemand henken.) 서양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잡은 법적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적인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인류는 단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처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독재체제에서, 공산주의체제에서, 파쇼체제에서, 냉전체제에서 수많은 인간이 생각의 차이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져 갔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자, 인간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의식의 눈을 뜬 것은 인간이 좀더 이성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징표였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사상을 이유로 처형되거나 투옥되었고,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향각서가 강요되었다.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이러한 반인륜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다. 처형자들이 왜놈에서 동족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였다. 권력에의 노욕(老慾)에 취해 있던 이승만, 자신의 매국노적 전력과 좌익투쟁 전력을 상쇄하기 위하여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투옥했던 박정희,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그들의 법적·사실적 적

양심수들은 자신들을 묶은 법은 결코 정법이 아니라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어기는 것이 자신들의 양심에 합치한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전향각서나 지금의 준법서약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준법서약은 위장된 전향각서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 김영삼, 이들 모두가 인간은 사상의 차이로 처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사상의 차이는 곧 정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발미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사람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걸었다. 그 기대 중의 하나가 양심수들이 밝은 세상을 볼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김대중 정권 최초의 특사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였다. 양심수에 대한 시각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정권들과 현 정권 사이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향각서' 폐지가 발표되었다. 그러면서 들이민 것이 '준법서약'이다. 양심수들이 검사 앞에 준법서약을 제출하면, 검사가 심사하여 석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준법서약'의 골자이다. 준법서약! 그것은 법을 어긴 사람이, 즉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석방을 해주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즉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감정에

맞는 법, 즉 '정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그러한 정법을 어기고 유죄선고를 받아 투옥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정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준법서약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얽어매었던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법이었고, 현재의 법도 이와 마찬가지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수들은 자신들을 묶은 법은 결코 정법이 아니라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어기는 것이 자신들의 양심에 합치한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전향각서나 지금의 준법서약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준법서약은 위장된 전향각서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양심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심수란 자신의 정치적 또는 도덕적 확신에 기하여 현행법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투옥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지한 내심의 소리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양심의 표현이다. 이데올로기, 노사대립, 통일 그 무엇이 되었건 그에 관한 양심상의 결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권력은 그 어떠한 양심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양심이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 자신의 양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양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양심들 사이에는 상호 우열이 드러난다. 다수의 양심에 잠정적 우위가 부여된다. 그러나 그 다수의 양심은 소수의 양심에 대하여 설득과 관용을 기울여야 한다. 다수의 양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증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양심수가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8 호

1998년 8월 3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순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76-1253 ·팩스) 74-7486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다시 고개드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감사원 권고 불구 예산신청 등 강력 추진

최근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위원회에 '주민카드 구입비' 등 1999년도 예산 322억원을 신청하는 등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강력하게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김영삼 정부가 96년 4월, 17세 이상 모든 국민 3천 4백만 명에게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스마트카드 재질의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두됐다. 전자주민카드는 특히 지난 97년 정기국회 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행 근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예산전용의 의심이 있다' 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업증지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98년 6월 27일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부적절'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수록사항이 축소되었는데도 소요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위·변조 방지기능이 우수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기획예산위원회도 행정자치부의 예산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대위·공동대표 김진균, 김창국)에 따르면,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위원회 외에도 국회 내무

위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이는 등 장·차관이 직접 나서 여전히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완전 철회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관련 법률의 재개정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행정자치부 김정길 장관이 기존 보수관료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

의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며 "행정자치부는 타당성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21세기적인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 재추진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전면적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대치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를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최근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노동 통제수단으로 악용'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 끝에 그 시행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안 싸우면 제2, 제3의 정리해고 못 막아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구속자 가족 천막농성장-

여름날씨의 번덕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제까지 찌는 더위와 모기가 괴롭히더니 오늘은 천막위로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울산의 단결된 투쟁의 소식은 한편으로 힘이되면서 한편으로 대조적으로 조용한 전주공장의 모습에 쓸쓸하기만 하다. 현자 전주공장 구속자 가족 천막농성 사흘째인 31일. 오늘로 정리해고에 항의하다 벌어진 몸싸움 때문에 7명이 구속된 지 열흘째. 그들 모두 열정적으로 현장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이다. 전주공장은 지금 248명의 정리해고 통보자중 200명이 강제 희망퇴직에 끝내 굴복하고 48명만이 힘겹게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동료 노동자들이 제2, 제3의 정리해고를 두려워해 집회조차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속자 가족들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남편의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만든 유인물을 나눠주며 싸움에 동참해주길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구속자 구자경 씨의 아내 임영란 씨는 "침팬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아무일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젠 하루하루 분주히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유인물도 뿌리고 해요. 여기 와보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좋은 일하다 그리 뻘뻘한 확신을 갖게 됐고 혼자서는 아니라는 생각에 힘을 얻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매일부터 있을 시내 홍보준비한다고 가족모임에 참석하러 간다.

제야인사 출국 '지역적 봉쇄'

안기부 요청 - 신문광고도 막아

최근 8.15 통일 축전을 앞두고 제야 인사의 출국이 봉쇄되고 있으며, 이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신병치료차 중국으로 떠나려던 윤성식 씨(전 사월혁명연구소장)가 김포공항에서 출국금지처분 대상자로 확인돼 여권을 입수당하고 출국하지 못했다. 윤 씨가 받아든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출국금지 사유는 적혀있지 않고 '1A'란 문자만 적혀 있었다. 확인 결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은 안기부였고 '1A'는 안기부가 사용하는 문자였다.

한편, 출국이 금지된 직후 윤 씨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해명을 안기부장에게 요구하는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내려 썼으나 이마저 안기부 입력에 의해 저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신문 광고부에 따르면, 7월 29일자 1판에 윤 씨의 광고를 게재했으나, 안기부 모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윤성식은 대법원이 불법단체로 판결한 범민련과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는 등 정부 당국에 반대해 온 요시찰 1급 인물"이라며 "공적 신문인 한겨레가 그런 광고를 내보낼 경우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 2판부터는 이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 5월,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 씨를 면회하러다 교도소 측의 제지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윤 씨는 자신이 '손병선 씨 면회를 제지하기 이전부터 이미 소위 'A급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 같다'며 "경찰과 안기부 등은 '신병 처리는 명분일 뿐 복인사를 접촉하거나 심지어 방북할 지도 모른다'는 주관으로 내가 출국하는 걸 막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씨가 한겨레에 내려던 광고■

<이종찬 안기부장 귀하>

... (중략)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이후의 발생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귀부의 책임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소 자유당시절 북벌논에 대한 평화통일을 주장하였고, 국보법철폐와 범민련·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출국금지 조치에 원인이 되었는지요?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속에서 민족모순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98. 7. 29 윤성식 드림)

제야원로, '양심수 조건없이 석방' 촉구

8.15 특사를 눈앞에 두고 제야원로들이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도 철폐를 재차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 등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공대위)에 참여하고

【 행사와 동정 】

- ▶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8.3(월)-8.6(목) 오후 5-7시 / 전주 외환은행 앞
- ▶ 양심수 전원석방 및 준법서약제 반대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6(목) 오전 11시 / 전주 중앙성당
-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강연회
8.6(목) 오후7시 / 익산 황실예식장 3층 / 0653-52-3608 · 858-8782
강사: 홍근수 (황린교회 담임목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 8.15 53주년 전북도민단속마라톤(자전거)대회 · 도민한마당
8.8(토) 오후 5시 /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 다가공원
- ▶ 주한미군범죄규정 및 한미행정계정 거리궤단인 · 우리찾기 지역주민 한마당
8.12(수) 오후4-7시 (군산시내) / 8.13(목) 오후7시 (군산비공군기지 앞)
- ▶ 제4회 통일열원 글쓰기 그리기 대회
8.13(목) 오전9시30분 / 전주 경기전
- ▶ 민족화해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각계인사 평화군속 통일선언 운동
7.29-8.15
- ▶ 제1회 어린이 방송교실
8.4(화)-8.7(금) 오후 4-6시 / 원불교전북교구청 2층 / 0652-231-9286

있는 각계의 제야원로들은 지난달 30일 '양심수 석방과 인권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사면 및 복권 △조사 또는 재판중인 모든 양심수 공소취하와 석방 △준법서약제도 즉각 철폐 △한총련, 범민련,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폐 △모든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 조치 해제 등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원로들은 "민선자치단체장까지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독재정권의 폭압통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또한 "일회적·시혜적 양심수 석방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법을 폐지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가협 통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구속돼 있는 양심수는 40년을 넘게 자유를 박탈당한 우용각 씨 등 17명의 초장기수를 포함해 모두 455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구속된 노동자, 학생, 청년들의 수는 232명에 이른다.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②: 실적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2. 전북지역 실업자 실태

전체 조사대상자의 67.2%가 가족 중 주된 생계책임자이다. 여성의 경우도 39.1%가 주된 생계책임자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주로 '생계보조자'로만 보는 일반적 상식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직년도를 보면 98년도 실업자가 61.4%로 가장 많고 97년도는 28.7%이다.

실직 이전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44.5%로 가장 많으나 구직 희망 일자리는 SOC 및 서비스업에 많이 치중됐다. 또한 직종별로는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블루칼라 직종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7%가 생계책임자

이전 직장의 급여수준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40.1%로 전국조사의 29%보다 많다. 특히 여성의 75%가 100만원 미만으로 남성의 26.6%에 비해 월등히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 여성의 39.1%가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하여 이들 여성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실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직 사유로는 도산과 휴폐업(25.2%), 정리해고(22.0%)가 가장 많고, 여기에 권고사직을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은 65.7%에 이른다.

퇴직금 액수는 500만원 미만이 40.1%로 저축(15.9%)이나 새로운 사업자금(5.7%)에 사용한 경우는 적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25%에 달하고 심지어 임금채 불도 17.4%나 됐다. 따라서 임금채권변제기금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6개월 이내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 40% 정도가 매우 어렵거나 전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장기실업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업대책 재원의 마련도 한시적 재원이 아니라 정부 일반회계에 매년 상시 조달가능한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며 그에 따라 대책도 일시적 이 아니라 제도적 상시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장기실업' 전망

구직활동을 얼마나 할 것인가 혹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60%는 다른 대안이 없어 끝까지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의 61%정도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직종이더라도 일단 취직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취업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에 비해 낮은 임금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실직자들이 얼마나 취업을 간절히 희망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실직자의 40%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30~50세의 남성가구주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의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 중 생계비 지원은 대부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와 공공근로사업이 양대축이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커버하는 대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150만명중 26만명)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실업보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업부조를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실업대책중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36%가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생계지원(26.2%), 실업급여 확충(17.8%)의 순이었다. 고용안정이 실직자 자신들에게 우선 당장 혜택이 없음에도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실직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여성실직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실업자의 39.1%가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했고, 36.7%가 가족내에 다른 취업자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들 여성들은 75%가 이전 직장에서 100만원 미만을 받던 저소득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이들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여성실업자 특히 여성 생계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생계책임자에 별도대책 있어야

실직자의 50~70%가 실직 이후 공포감, 배신감, 분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20~30%는 실직 후 처음에는 실직 사실을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으며, 심각한 가정불화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살유혹도 느꼈다고 말해 실직자들이 겪는 사회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실직 이후 가족의 총소득과 월생계비 총액을 조사했다. 월 가구총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34.8%였으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전체 응답자의 48.4%에 달했다.

가족총소득 수준에 따른 생계비의 총족률을 살펴보면, 70만원 미만 소득층의 경우 가족의 총소득으로 생계비의 74.6%만을 충당하는 이른바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0~1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99.8%의 생계비 총족률을 보이고 있어 월평균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전북지역의 실직자 중 고령층, 저소득층, 실직가구주층의 어려움이 한층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대책이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

최원규(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사회의 어저울은 시장다운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에 불거진 보건소 통폐합 논의나 군산의료원 폐업결정 논의는 단순히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급방식을 둘러싼 효율성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작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공무원 감축, 공공 조직개편, 휘발유를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인상 등을 관통하는 한가지 이념은 신보수주의적 이념에 다름 아니다. 간략히 말해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급적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많은 산출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나 학교교육, 사회복지 등을 잴다면 비효율의 극치를 얻어낼 수 있다. 도시지역의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들도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인구과소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개편(?)에는 전국의 보건소를 점차 폐지하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다. 이 경우 농어촌과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해왔던 보건의료서비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공공재원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는 상황에 어떤 민간병원이 농어촌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분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점차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시골의 학교들은 교사가 한 명이든 여러명이든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볼 때는 낭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주 대상인 생활보호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보면 구

조조정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사회복지에 투자(?)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그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노인들이 농촌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촌은 아파도 찾아갈 의료기관도 없고, 혹시 귀농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교육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유지는 엄두도 못낼 그야말로 살기 힘든 불모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가상적인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 사회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자상최고의 가치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도시에 소규모의 잘배운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만이 존재해야 한다. 농촌사람이나 못배운 사람 그리고 막노동이나 하면서 못사는 사람이나 홀로 남은 노인, 장애인들은 '퇴출'되어야 한다(그들이 퇴출되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치 않다. 어찌하면 그냥 아무런 흔적없이 사라져주었으면 좋을 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자기자기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구조조정을 소리높이 외치면서 보건소 통폐합, 농촌 분

교 폐교,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시장질서의 회복 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방금 위에서 가정해본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는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다른 중요한 가치기준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효율성이라 부른다. 경제적 효율성이 시장에 대한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라면, 사회적 효율성은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가치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어려움은 시장다운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농어촌 지역에는 보건의료기관이 희소하여(시장의 결함),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사회적 효율성)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적 곤경에 빠진 오늘날과 같은 시기일수록 이러한 곤경을 초래한 시장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민간에 위탁하자는 도시의-시장주의적 가치로 무장한-관료와 행정가들의 무지와 무신경 나아가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때는 '돌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한 사람들이 '떠나는 농촌', '살기 힘든 농촌'을 만드는 행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호부터 다음 분들이 인권평을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문정현(군산 오동동성당 신부)
최원규(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경석(민주노총 전북본부 의장)
박정희(전북여성노동자회 회원)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9 호

1998년 8월 1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76-1253 ·팩스) 74-7486
·통신ID) onespark(전.나.녹등)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양심수 가두고도 민주정권?

양심수 전원석방 위한 각종 행사 이어져

8.15 특사를 앞두고 정부가 양심수 석방에 관한 보수적인 입장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이 전개돼 1600여명이 서명했고, 각계 인사들도 150여명이 서명했다. 동시에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서약제 반대!' 글이 새겨진 리본 1천개가 시민들에게 나누어졌다.

6일에는 8.15를 앞두고 마지막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중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중요단체 원로들은 "준법서약제는 과거의 사상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사면·복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루감옥체험' 행사도 열렸다. 실제 독방 크기로 짜여진 0.75평 정도의 공간에서 양심수들의 고통을 나누어 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지원 스넵(송광사), 이강실 목사(전북여성운동연합 상임의장),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원)씨 등이 참가했다. 또 일반시민인 최영아(39세, 주부)씨도 길을 가다 자발적으로 '감옥체험'을 가졌다.

같은 날 저녁 익산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강연회'(강연 내용 : 2면에 요약)가 개최됐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

한 대추전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등 단체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강연한 홍근수 목사는 "김대중 정부는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약법의 개혁없이 민주화

와 개혁을 말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 4면에서 이어짐) 노력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땀으로 흑자를 내서 부를 축적했으니 당연히 어려울 때도 함께 나눌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공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재벌들은 알아야 한다.

[인권간행물]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

윤 찬영 / 전주대학교 출판부 / 1998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인간성 유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방임상태에서 결코 인간성이나 공동체 등에 대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다 ... 시장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다. 인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로서의 복지사회가 성립돼야 한다."

시장의 논리는 극대화되어 실현되고 있으면서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지는 불모지인(개념조차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사회복지지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선심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는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학의 초심자와 비전공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이란 책을 냈다.

윤교수는 "그동안 대학강단과 일반 시민대상의 특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학 교수들조차 사회복지에 대해 너무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점에 놀랐는데 그것은 사회복지를 너무 쉽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시정으로 사회복지 현실의 단순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만도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면서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적 상식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책을 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론가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저술한 책이기에, 경제난국으로 오히려 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할 지금, 이 책은 대학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권장할 만하다.

도원동 철거주민 연행구속 사태

전경·구청직원 합세 전원연행 후 석방, 대표는 구속

강제철거에 항의, 구청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던 도원동 철거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원 연행되고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철거민연합(대표 남경민)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병력 2개중대와 용산구청직원 300여명이 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중이던 도원동 철거민 8명을 전원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자중 최경숙(여.40세, 대책위원장 대행)씨를 업무방해 및 폭력 혐의로 6일 구속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하루만인 5일 오후 석방했다.

그러나 석방된 주민들이 연행과정에서 압수당한 가재도구 반환을 요구하며 6일 용산구청을 항의방문하자, 용산경찰서와 구청직원들은 또다시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가 이들 뒤인 8일 오후 '불구속 입건'한 뒤 모두 석방했다.

전철연은 "재개발사업에 하등의 관련도 없는 경찰관들이 그것도 검사와 과장급 경찰 간부들이 총동원되어 주민들을 협박했다"고 밝히고 "서울지검 공안2부와 용산경찰서는 삼성재개발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연행된 주민들은 철거 이후의 '근본적인 주거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 100여일째 노숙투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한편 도원동 철거지역의 경우, 지난 4월23일 경찰병력과 구청직원들에 의해 강제철거되기까지 당국과 주민들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구속자가 속출했는데, 구속자들중 과반수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화해안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자의주적인대응

- 열서 8월 13일 오후 7시
- 장소: 용산역구치서 형동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③

실적근로자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3.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실업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에도 대처해야만 고실업의 장기화가 야기하는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실업은 단순히 소득상실이라는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업대책은 생활안정의 수단을 보조해주거나 구직서비스만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시켜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시켜주는 서비스의 병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고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실업대책은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계획아래 제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구상되는 실업대책은 단순히 IMF의 관리를 받는 1-2년만 한 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될 고실업시기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단기처방 위주의 실업대책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은 우선 현재의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단기간에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으로 한시적 재원확보에 따른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일반회계에 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경제력 이상으로 부담해는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실업축소 정책 유명무실

실업대책의 최우선적인 것은 고용안

정인데도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등에 대한 정부단속조차 미미한 형편이다.

■ 실업대책 대부분 사업의 문제점

대부사업은 결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책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대부시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경편이 나은 구직자에게나 용이하다. 개인 파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은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 현행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제의 한계

고용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너무 많고 최장 120일밖에 지급되지 않는 실업급여 기간은 비현실적이다. 실업급여를 소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급여수준, 즉 국민복지 기본선을 설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 여성가구에 대한 별도 대책 시급

IMF체제가 가져올 결과의 하나는 빈부의 양극화이다. 특히 여성의 빈곤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 여성의 40%가 생계책임자이며 가족중 다른 취업자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우선고등 부당한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실업이나 국민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은 집단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자료 소개를 마칩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강연] 국가보안법 철폐없이 '개혁'은 거짓말

-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편집자 주] 여기 발췌하는 글은 지난 6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전북본부' 주최로 익산에서 열린 행사 중 홍근수 목사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강연 제목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이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국시와 함께 북진통일, 승공통일, 별공통일 정책을 내세운 매우 호전적인 반공정권이였다. 또한 동서냉전체제하에서 미국측에 편입되었던 그 정권은 그 존재의 근거와 기반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 이와 대립하는 반공에 두었다.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그러한 배경에서 생겼다. 박정희-김종필 군사독재정권 역시 반공에 그 존립의 근거와 기반을 두면서 한편으로 민주화를 유보하고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약탈하게 억압, 탄압하였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6년 전인 1992년에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였다. 기존 군사독재정권의 자궁 안에서 출생한 사이비 문민정권이였다. 이것은 하필 그 정치적 족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국보법이란 악법을 그대로 존치했었고 그에 의해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 냈으며 반통일-반북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국보법에 관하여는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한다고 했으나 이에 상응된 법이 북한에 있다(사실인지?)는 이유로 그 철폐를 거부하고 다만 그 법에 있는 독소조항을 손보고는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후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대통령 취임 반년을 지나게 된 것이다.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여 종전 정권 때에 비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적은 양심수를 석방한 그는 이번 8월에 양심수를 대량 사면, 석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과거의 사상전

향제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환영을 받았으나 엉뚱하게 그 대신 '준법서약각서'를 내놓아 양심수 대량석방 계획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역대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문제의 '현주소'이다.

국보법 정치적 이용 여전

이 정권은 종전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감옥에 있거나 수배당하고 있는 정치범, 양심수를 석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정치범,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정권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종전 정권이 투옥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양심수를 감옥에 투옥했다는 믿기 어려운 통계가 있다. 즉 김 정권 출범 이후 단 5개월 동안 구속된 양심수 총수는 모두 23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여 국보법으로 특히 젊은이들을 이적죄, 고무찬양죄, 간첩죄 등의 혐의를 덮어씌워 파 구 감옥에 보내고 있다.

이 법의 철폐를 거부한다든가 종전의 반민주 정권에 의해 투옥되어 있는 양심수의 무조건적 즉각적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든지, 이번 8.15에 양심수 석방을 발표하면서도 '준법서약각서'를 전제적으로 쓸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도 국보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해 새로이 많은 양심수들이 체포, 투옥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법이 정권안정이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악법에 불복할 도덕적 책임

국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은 기존 악법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인

데도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이다. 그 대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 나라의 노동자들의 운명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악법은 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미국의 민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정당한 법률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법률에 복종해야 할 합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당한 법률에 불복할 도의적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법적인 군인정치가 지질렀던 모든 불의와 악을 청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어느 정권이라도 이러한 반민주적 질서를 바로잡기 전에는 민주정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그러므로 장기수들을 포함하여 양심수들을 무조건 즉각 전원 석방하여야 하고 수배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수배해제해 광범한 하늘 아래에서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이 말을 듣고 각성하라.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법, 국보법이라는 이름의 세기적인 악법 중의 악법을 즉각 철폐함이 없이 국민의 정부나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변하여 존립근거가 무효화되고 반역사적인 법, 시대의 정신과 양심의 법에 상반되는 법, 민주적 상식에 어긋나는 법, ...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법, 즉 국가보안법, 이 법을 당장 철폐하라! 이런 법의 철폐없는 민주화나 개혁 등은 새빨간 거짓이고 허구이고 빈 약속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땅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한 후에,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를 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악법의 개혁없이, 민주화와 개혁을 말하지 마라.'

IMF 시대의 여성노동자

박정희(전북여성노동사회 회장)

최근 언론에 주부들의 유혹이 취업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언론에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단 단순히 현상적인 것에 맞추어 얘기가 됐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먹고살기 위해 내몰린 여성들이다.

서울여성노동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상담전화에 구직문의를 하는 여성구직자들 중 희망 취업직종으로 "아무일이나"로 답한 여성들이 10%나 차지하고 있다는 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절절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IMF로부터 재벌구조의 개혁과 시장경쟁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이해를 등에 업은 IMF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긴축재정으로 인한 공황의 심화, 국제투기자본의 대대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자본시장의 악화, 실업의 증가, 저임금과 빈곤의 악화, 물가와 세급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진정한 민주주의의 퇴보,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가속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국내시장의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워 그 여파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텐데도 기업들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할 정리해고를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남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대량해고하고 있어 정작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어 임시직이 전체노동자 중 45%나 되는데도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상황이 아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용역이나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 또한 최대의 실업정책은 실업에 방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엄벌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범람하고 있고 실업정책이라는 것들도 정작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실직상태로 인한 가솔과 자살, 자식유기 등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하루하루 전쟁 그 자체이다.

또한 현재 실업자가 아니어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실업의 불안감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가 관쳐도 현장은 지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고 참담하기까지 하다.

1997년 3/4분기 고용동향(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여성 실업자 증가율은 남성에 비해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가 취업여성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의 하청인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부도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몇 달 동안의 임금 채불되어 있는데다 퇴직금도 받지 못해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들 중 젊은 여성들은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그나마 취업이 되기도 하지만 어중간하게 나이가 많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 일하던 사람이 대부분이라 실업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남성은 생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성은 언제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이테올로기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의 1순위로 내몰고 있다.

그간 정부는 저임금의 단순노동으로,

임시노동력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정책을 여성노동의 주요 기조로 실행해왔고 이제 IMF체제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80년대 말에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경험해야 했던 실업과 부당해고의 고통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무분별하게 외국돈을 빌려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인 재벌들 또 그들을 비호했던 경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실업대책, 직업훈련 및 재취업알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등한 고용대책 및 사회보장장 확충을 획기적으로 약속할 것, 임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에 따라 공평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실직은 죽음을 의미한다. 경제논리가 모든 걸 제치고 우선하는 상황에서 IMF한파를 이유로 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그리고 현장의 산업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장기화되고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해 군비축소 등 국방예산을 줄여서 실직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수준의 실업급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노사정위에 들러리만 세우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전담을 요구하는 정부는 사고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해고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시간단축과 배치전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최대한 노동자들에게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1편에 이어짐→]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0 호
1998년 8월 1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76-1253 ·팩스) 74-7486
·통신ID) onespark(천.나.독)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뒤로가는 인권정책

8·15 특사,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8.15 특별사면에서 전체 양심수 450여명 가운데 103명만이 석방 또는 감형됐다.

정부는 15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양심수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을 감형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서도 진창식·석달윤씨 등 14명의 양심수가 석방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가협 등 인권단체와 구속자 가족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양심수 석방에 관한 정부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사면에서 '준법서약서' 작성을 양심수 석방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최선목씨 등 28년 이상 수감돼 있는 초장기수 17명과 손성모·신광수씨 등 비전향 장기수들이 석방되지 못했다.

석방된 양심수들도 모두 형집행정지(25명)와 가석방(69명)에 따라 석방돼, 피선거권 등을 제한당하고 보안관찰법 등에 의해 각종의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정호용씨 등 5·18과 12·12 관련자, 안현태·이현우씨 등 부정축재범, 권노갑씨 등 한보사건 관련자 등은 전원 잔형면제나 복권 등을 통해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 양심수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면과 대조를 이뤘다.

전주교도소 석방 양심수는 손병선, 허정길씨 등 9명이며, 군산교도소 석방 양심수는 김종태씨 등 5명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가운데 남한조선노동

당 사건의 최호경씨(무기)와 비전향장기수 김창원(납과사건, 29년 구금), 손성모(납과사건, 17년 구금), 신광수(납과사건, 13년 구금)씨 등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석방에서 제외됐다.

전북민가협 등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 △양심수 전원 조건없는 석방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폐지 △준법서약제를 비롯한

각종 전향공작장치 해체 △양심·사상의 자유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석방된 양심수들은 전주교도소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석방환영대회에 참가한 뒤, 교백교회(이강실·한상일 목사)에서 식사와 간담회를 갖은 뒤 가족들과 함께 귀가했다.

한편 이날 가족들로부터 노모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한 허정길씨(87년 6월항쟁관련·11년 구금)가 말문을 열지 못하고 황급히 고향으로 향해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허씨의 철순 노모는 지난 김대중 정권 최초의 사면인 3·13특사에서마저 아들이 석방되지 못하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8.15 특사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시각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들을 모두 제외한 것은 준법서약 자체가 비인도적 제도라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세계 최장기수 우용각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지난 정권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해 마지 않는다. 출소공안사범에게 보안관찰법 적용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현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 개선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 94명만이 석방되고, 석방이 되어서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보안관찰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정부의 인권개선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조속히 석방하는 한편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과 배상에 성실히 임하라.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다른 조건없이 사면하면서 유독 양심수에 대해 준법서약을 적용해 선별 석방한 것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국가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을 대거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다.

“울산 현자, 용역깡패 모집”

용역업체 면접까지 받은 두명으로부터 제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농성장)에 회사측이 용역깡패 300여명을 투입하려 한 사실이 발각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용역업체에 지원해서 면접까지 받았던 두 사람이 노동조합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인력 용역업체인 'SOS7(주)'에 경비인력을 요구했고, 'SOS7(주)'은 '모전(주)'이라는 업체에 채용역을 요구했고, '모전(주)'은 또다시 '탐정(주)'이라는 업체에 채용역을 의뢰해서 인원을 선발했다.

“폭력 유발 자신있나”

모집된 인원은 8월 4일 오전 9시 경 주 조선호텔에서 현대자동차 총무팀 김종관 과장 외 2명에게 면접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남자의 경우 “3-4명씩 조를 짜서 농성장에 투입된 후 조합원을 분열시키거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데 자신있느냐”, “정보수집능력, 특수부대 출신유무, 무술실력 여부, 쇄파이프 등 무기사용능력, 개인이 4-5명의 사수대를 격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 등이었고, 여자의 경우 ‘머리띠(노동자로 위장)를 메고 농성현장에 들어간 뒤 정보수집능력과 무술실력’ 등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들 용역업체에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310명의 인원을 지원요청했고, 그중 140명은 이미 면접까지 끝난 상태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선발된 인원들이 15일부터 현장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산업연맹은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은 회사에 생존권이 달린 정리해고단은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도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더니 급기야 아녀자와 아이까지 있는 농성장에 살인을 능가하는 엄청난 폭력과 파괴를 자

행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투쟁을 제압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노동조합 내부 분열과 공권력 투입 빌미를 찾기 위한 것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3만 노동자는 물론 금속연맹의 모든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주공장 농성장도 살얼음판 회사의 용역깡패 동원 사실이 밝혀지자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동안 회사측의 폭력행위에 대해 대응을 자체 하던 것을 철회하고 13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정몽규 회장 등 중역 간부들의 폭력행위를 비롯한 그동안 관리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정몽규 회장 등 87명을 14일 울산 등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14일 구속자가족 천마농성장 부근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40여명의 남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목격돼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농성장에는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들의 지지·격려방문이 있었다.

구속사태 책임 발명

각계 대표, 전주공장 면담

지난 14일 오후 2시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자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정리해고 중지 △구속 노동자 7명에 대한 고소취하 등을 사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장이 참석하지 않고 인사팀장과 총무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주공장은 “구속자 고소취하는 인사권에 관련

된 사항으로 울산 본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구속사태에 대한 책임을 본사에 돌렸다.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주공장에서 정리해고자는 8명 뿐”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정리해고자 248명 전원에 대해 2년간 무급휴가 후 복직시킨다”는 기약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알림] 전화번호 바꿉니다

8월 23일부터 전주·완주 전지역 전화번호 국번 두 자리가 세 자리(XX → 2XX)로 바뀜에 따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화번호도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 전화: 276-1253

■ 전송: 274-7486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사고지역 따로없다

대인지뢰 대량 유실 - '금지협약' 가입 서둘러야

수도권 집중호우로 유실된 대인지뢰가 거의 수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사망피해까지 발생해 대인지뢰의 위험이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경기도 양주군 덕정리, 파주시 법원리, 고양시 벽제, 평택시 안중, 의정부 인근의 공군 방공포대들에서 M14대인지뢰(발목지뢰) 350여발이 유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낮 인천 세어도 해안에서 피서중이던 신동선씨가 폭우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밟다 발목지뢰를 밟아 발가락 4개가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사 부근 마장천 계곡에서 복구작업을 하던 굴착기 밑에서 대인지뢰가 터지기도 했다.

이번 수해로 유실된 M14대인지뢰는 높이 4cm, 직경 5.5 cm, 무게 94.2g으로 육안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밟으면 바로 폭발해 발목이 잘려나가게 된다.

대인지뢰는 매설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거나 매설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유실된 대인지뢰뿐 아니라 앞으로 유실될지 모르는 대인지뢰에 대한 대책도 속수무책일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인지뢰가 유실된 지역은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의 군부대들로, 이는 대인지뢰가 비무장지대에만 매설돼 있었다던 지금까지의 군과 정부의 공식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군산시 옥구읍 공군 제 8989부대 철조망 전지역에 살상용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음이 지난 2월 군당국의 발표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95년 이후에만 해도 산사태와 호우 등으로 M14대인지뢰·K14대인지뢰 등 유실된 발목지뢰에 의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달았고, 보고된 경우만 한 해에 10여건의 사고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25개 국가가 가입해 발효된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에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들어 가입하지 않았다.

“미군철수·국보법폐지”

전가대협, 미군기지 앞 집회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통일순례단

과 전북가톨릭대학생연합회 회원 60여명은 13일 저녁 6시에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땅찾기’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이들은 기지 철조망에 태극기 20여개를 걸고서 “조국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경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가대협 통일순례단은 △범민련, 한총련 포함한 8·15 대추전 성사 △7·4 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이행 △주한미군 철수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전국을 순례했다.

[자료] 대인지뢰 유실사고에 대한 성명

(중략) ...우리는 이번 호우로 인하여 다량의 대인지뢰가 유실되어서 인명피해까지 초래된 사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진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대인지뢰금지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어, 마침내 작년 11월 오타와에서는 대인지뢰금지조약이 체결되어 125개 국가가 서명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중략) ...

대인지뢰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고, 한번 매설하면 반영구적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대인지뢰를 추방되어야 할 불법적인 무기로 낙인찍었다. (중략) ...

우리는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인지뢰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우선 유실된 대인지뢰로부터 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그 동안 대인지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한국에서 ‘대인지뢰는 비무장지대에만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실태를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인지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그 동안의 시각을 대폭 전환하여 대인지뢰의 불법성을 직시하고, 대인지뢰를 철거할 계획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어렵다면 대인지뢰를 제거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와 60개국 1000여 개 민간단체 그리고 125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대인지뢰금지운동에 발맞추게 되어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8. 8. 11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노동자가 주장하는 경제정의

염경석(민주노동전북본부 부부장)

경제위기에 대한 공평한 고통분담을!

아시아의 4대 용,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OECD 가입국,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개막,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노래했던 김영삼정권은 마침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강대국과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도를 막아준 구세군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을 통제해 가고 있다.

20세기말 한국은 마이너스성장 고실업의 시대를 맞고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기쁨도 잠시 IMF와 함께 시작된 국민의 정부는 경제개혁=구조조정=강제적 퇴출과 기구축수라는 정책기조로 강제퇴출 및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공시통계상 6월말 현재 실업률 7.0%에 실직자는 153만명에 이르고 주당근로시간 18시간비만의 불안전취업자를 합하면 21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전북지역도 6월말 현재 5.5%, 48,000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되돌아 보자.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군사독재정권시절 고도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의한 수출증대를 통해 나라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본과 정권의 주장은 "파이를 키워야 나누는 몫이 커진다"는 이데올로기로 노동자의 정미 및 미래를 약속하였다. 87년 6.29이후에 폭발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요구되어 많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노동자의 희생으로 커진 파이를 노동자도 함께 나누자"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매년 높은 임금인상을 가져왔다. 이 결과 노동자들의

부패권력과 대자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을 전달하라!

실질임금이 인상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저성장의 원인을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덩달아 "경제성장제일주의", "국가경쟁력강화", "고통분담론" 등 자본편향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며 해마다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 임금억제정책을 펴고 노동약법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노동억압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어떤 정권 - 일제식민지배정권, 민간독재, 군사독재, 문민정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들어선 국민의 정부까지 - 도 노동자의 저항의 정도에 따라 억압의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노동억압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생산성향상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인상을 해왔다. 그 결과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의 특혜금융과 노동억압정책의 비호를 받아 자본은 기하급수적인 자본축적을 할 수 있었다. 정부의 노동억압적 친자본적 간섭에 의해 노동과 자본의 분배구조가 왜곡돼 왔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왔던 것이다. 87년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잠깐 동안의 노동우위적 분배구조를 제외하고는 자본우위적

분배가 지속돼 왔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경제에서 분배문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정부와 자본에서 거론하고 있는 고통분담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 부패권력과 대자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분담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인과응보요 책임정치 책임경영이다. 그런데 요즘 진행되는 고통분담의 모습은 노동자와 소자본의 고통분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경영에 참가해보지도 못한 그래서 책임이 없는 노동자와 소액주주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생산성향상보다 낮은 임금인상을 해 온 노동자들에게 실질 또는 임금삭감이라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고통을 전달해야 할 부패한 정치인과 대자본가는 고통분담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은 고통분담조차 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와 소자본에게 전가하고, 잠깐 그것도 부분적인 대주주의 사재 출자는 온데 간데 없이 부와 권력의 독점을 위한 대자본간 정당간 주도권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백보양보한다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과실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고통을 많이 분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과실의 분배비율에 따라 경제위기 고통의 분담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20%희생으로 80%를 살린다면 살아남은 80%가 희생된 20%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원리요 살아남은 자의 양심이다. 이 땅의 노동자와 자본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금까지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순재산의 1%를 매년 고통분담제로 납부하여 20% 희생자의 생계를 책임지자. 이것이 진정한 고통분담이 아니겠는가?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1 호

1998년 8월 24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순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전.나.독우)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태령, 이윤은 넘치고 노조원은 자르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 간부 등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전북 익산 소재 (주)태령상호신용금고(태령·사장 김재현)는 지난 7월 18일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모두 정리해고했다.

경영 양호 불구 정리해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태령 노동조합 노조위원장·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평에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전체 간부 4명이며, 이들은 7월 16일자 해고통지문서를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태령 노동조합원은 모두 8명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 익산과 전주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고소장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태령은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창사 이래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등 정리해고를 단행할 건박한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태령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9개 상호신용금고 가운데 '자기자본대비 이익률'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령은 생산성 악화를 우려한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해 7월 이후 사원 6명을 신규채용하기도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난 93년 새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원 가량을 지출

했는데 올 3월 또다시 사장실 등을 새롭게 꾸미면서 9천만원이나 지출했다'면서 회사의 방만한 경비지출을 비판하고 있다.

노조식 지부장은 "회사가 처음에는 사원협의회라는 것을 제안해 와 노조

가 불참하자 구구조정 계획을 통보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며 "이러한 요식절차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인반구 사전협의도 없이 해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회사의 진짜 의도는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1, 22일 회사 앞에서 민주노동전북지역본부, 전국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 간부 등 150여 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갖고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국가보안법 7조를 아십니까

-인권운동사랑방, 국보법 폐지 위해 사례수집

"국가보안법, 우리가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다른 조항보다 남용이 심각한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 자료를 모으고 있다. 판결문과 공소장, 구속·압수영장 등 법적 자료와 관련 성명서 등을 보내주면 된다. 이는 93년 유엔 비엔나 인권회의 이후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권촉진모임에서 결정된 '98-99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는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상당수는 이 조항으로 위였었다.

'인권대통령'이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구속된 압심수가 303명으로 이중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전체의 59.7%인 181명에 이르고, 사상전향을 대체한 준법서약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끝장내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내실 내용 : 개인별,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1991년 5월 31일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적용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장, 구속·압수영장 등 법적 자료와 관련 성명서 등의 자료

▶보내실 기한 : 1998년 9월 30일까지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김 수경, 김 정희)

상록수 가르친 교사 파면

서울 영신여학교, 전교조 교사 탄압

특별활동 시간에 상록수 등의 노래를 가르치고, 학교 이사장(김창인 목사)이 집전한 부흥회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등 이유로 한 교사가 파면당했다. 지난 달 28일 서울 영신학원의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 김용섭씨(33)에 대해 영신학원측은 '근무지 무단이탈,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집단행동 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했다.

영신학원측은 "김교사가 특별활동반인 '우리노래연구반' 지도교사로 상록수, 행복은 성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방학 등 '반사회적 노동노래'를 가르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또 부흥회 도중 자리를 비운 것(10분)이 무단이탈로 규정됐다. 이 밖에도 김교사가 공휴일에 'IMF시대 교사 1천인 선언'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가 주관한 서명운동에 두차례 참여해 집단행동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영신학원은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교사와 10여명의 동료 교사들은 29일부터 최근까지 김교사 파면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해내에서 벌여왔다. 농성에 참가한 한 동료교사는 "대부분 교사는 말도 안된다고 한다"고 교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은 "김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교사들의 건전한 비판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사학재단의 폭거이자, 법제화를 앞둔 전교조에 대한 사학재단의 불안감 표출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교사 및 동료 교사들의 징계 철회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재단인 영신학원측은 "사표를 내면 징계는 없던 길로 '하했다'는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김교사는 이를 거부했다. 영신학원측의 파면처분에 대해 김교사는 현재 교육부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교사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직 처분을 받게 되면 5년간 교사자격을 박탈당하며 김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재심에서 재

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 파직상태로 지내야 한다.

영신학원은 전에도 보충수업 강요를 거부하는 교사를 담임지에서 해직시키기도 했다. 또 교사들에 따르면 일부 관리자들의 교사들에 대한 폭언 등도 단반사로 행해져 왔다.

한편 이같은 영신학원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탄압에는 즉벌체제로 운영되는 이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남 목사 다시 구속

8·15 통일대축전 행사 직후

제야 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강희남(78세) 목사를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제9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 시내에서 모두 2백 5명을 연행한 바 있다.

구속된 강목사 등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대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제9차 범민족대회 행사를 가졌다.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

던 나종일, 조백현, 이은희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인권운동 젊은연대' 창립

전북지역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포괄적인 인권운동을 표방하며 22일 '인권운동 젊은연대'를 창립했다.

[알림]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8월 23일부터 전주·완주 전지역 전화번호 국번 두 자리가 세 자리(XX → 2XX)로 바뀔에 따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화번호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전화: 276-1253
■ 전송: 274-7486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액수에 관계없이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 바랍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쓰는 이유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사건 구속, 안동교도소 수감중)

[편집자주] 이 편지는 지난 8월 15일 강용주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20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읽혀졌다.

(중략) 사랑하는 어머니!

플라스틱 창을 사이에 두고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면회 내내 울고 계셨던 어머니, 13년 감옥살이 그 슬한 면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당신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준법서약제도가 발표된 지난 7월 초순, 당신께서 조심스럽게 "준법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지요. 그 때 저는 그저 "어머니,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라고 밖에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중략)

13년전 어머니와 했던 첫 면회가 생각납니다. "전향을 해라. 전향을 하면 나온다더라" 하셨을 때 이 불효자식은 "그런 말 하실려면 다시는 면회도 오지 마세요"하고 면회실을 뛰쳐나갔지요. 그 후로 당신은 전향하란 말,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전향제도가 두려웠습니다. 86년 무기형으로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15사로 이감했을 때 전향하지 않는다고 30년, 40년 감옥살이 하던 장기수 할아버지들, 산 송장과 같은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전향하지 않으면 나 역시 어떻게 될 수 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암에 걸린 장기수 한 분이 비전향수라는 이유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이 억울한 감옥살이, 전향제도 없어지는 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전향제도 폐지하라고 단식 했던 날을 세어보니 200일이 넘었더군요. 저는 제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당신도 끼니를 거르며 지내셨던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중략)

7월 1일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한다며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

다. 준법서약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 무슨 해괴망칙한 발상인가, 참으로 서글웠습니다.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는 못할 망정 준법서약이라니.... (중략)

서약서를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고통도 끝날 수 있을텐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개워내고 심사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있는 편이 제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스런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전박한

이 유행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심오척 담 안일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법 지키겠다고 쓰고 나와서 또 활동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할 이도 있겠지요.

어머니, 어쩌면 저는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80년 5월 26일 저녁 계엄군이 진입해 오던 순간 총을 들고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도 빠져 나올 판에 죽을 지도 모르는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들어가 어머니 속을 무뎠히도 썩혔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앞날이 보장되는 의사되기를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재판 받을 때는 검사가 사실인정만 하면 낮은 형을 주겠다는 회유를 거부하여 사형구형을 받고, 무기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전향서 대신 생활계획서나 각서를 쓰면 사면시켜주겠다고 했어도 거절한 바보잖아요.

명청하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93년에 전향 안하고도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적도 있으니 그것이라도 어머니께 위도가 될까요.

제 만기일인 2006년 9월 22일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흔 셋의 당신을 생각하면 아려오는 아픈 가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제발.

98년 8월 15일
안동에서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용주 올림

8.15 석방 전후

■ 8.14 박상천 법무부장관, 보안관찰 강화 시사 = 일부에서 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을 걱정하나, 만기 전에 석방되는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 하며, 이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관찰을 받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다.

■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관련 200여명 연행 = 강희남 목사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 경찰에 연행. 시위 참가자 205명도 연행·조사.

■ 8.16 법무부, "법 폐지 주장하는 표현행위도 처벌" =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

■ 8.19 법원, 관노청에 국가보안법 유죄선고 =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유죄선고.

■ 8.20 경찰청 앞, "용공 매도 중단하라" =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사대책위 소속단체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경찰청 앞에서 '용공조작과 노동운동 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공안기구 해체' 등 촉구 집회.

■ 8.20 민가협, 미석방 양심수 가족 등 목요집회 제개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경내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편집자주] 이 글은 배경내의 석사학위 논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중 '국문요약'이다. 저자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훈육과 은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규율에 복종해야 '학생답다'는 억압적 기준에 구속된 존재들이며, 교문 앞에서 모든 권리를 유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문화와 권위주의문화는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형성하며, 반(反)인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에 있어 입시문화와 권위주의문화가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통제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입시문화와 권위주의의 이중주 통제의 메커니즘은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장치', 그리고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삶을 억압하는 학교규율은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제정되며, 엄격한 처벌장치를 통해 유지된다. 이러한 억압적 규율과 처벌장치로 인해 학교에서는 '통제와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통제의 메커니즘은 학생들의 인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당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조건을 형성한다.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엄격하고 비합리적인 학교규율은 체벌과 언어폭력, 각종 검사제도 등의 통제장치를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통하여 강제, 유지되는데, 특히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학교규율은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의 권리, 생활양식의 자기결정권, 의사표명권, 사생활권, 청소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학교는 또한 교장과 소수의 교사들이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관료적·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학교는 입시 논리만을 앞세운 채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고 있으며, 학급회이나 교지(校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학교문화와 관행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검열, 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표명권, 자기결정권, 언론·출판의 자유,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무관심, 통제위주의 학교방침 등으로 인해 자치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운영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결사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문화생활과 휴식을 누릴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인권 문화·구조 재생산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제와 폭력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규율은 학생들을 권위에 대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인간, 폭력에 길들여진 인간, 수동적인 인간 등으로 만들어낸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의 체계적인 배제와 자치활동의 억압의 경험은 학생들을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결여한 인간,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을 결여한 인간,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결여한 인간으로 만들어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반(反)인권적인 학교문화와 인권침해의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학교혐오증,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등을 갖도록 만들며, 더 나아가서 또다른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결국, 인권침해의 경험은 반(反)인권적인 구조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대다수의 관련 행위자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순응, 공모(公募)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망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학생들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회나 '학복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이고도 집단적인 형식으로 찾아나가는 성숙한 모습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이 거대한 학교의 구조와 문화에 맞설 만큼 조직된 힘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2 호(6면)

1998년 8월 3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순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전.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문규현 신부 구속

무리한 국보법 적용 공안기류 조성

북한 방문기간중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로 문규현(전주 서학동성당 주임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대표·53) 신부가 지난 27일 구속됐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적용은 공안기류의 자의적 잣대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문규현 신부의 방북 활동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확대하여 국보법을 적용했다. 특히 미사봉헌을 위해 통일대축전(북측)에 불가피하게 참가할 수밖에 없음을 문규현 신부 일행이 축전 하루 전인 14일 저녁 통일부와 안기부 등 당국에 통보한 사실을 덮어두고 있고 문규현 신부가 축전에 참가해 발언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이를 받아들인 축전을 북에서 거부한 데 대한 유감 표명, 남북 대화 재개 및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제쳐두고 공안당국은 오로지 축전에 참가한 사실만을 두고 문규현 신부를 구속하는 졸렬함을 드러냈다.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은 방북 사제단 일행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규현 신부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발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 말씀과 민족적 미덕에 따른 것이라는 게 방북 사제단과 양심세력의 주장이다. 결국 공안당국은 무리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적용을 위해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규현 신부가 구속되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문규현신

부석방대책위(22개 전주교단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전북본부 등의 규탄성명이 잇따랐다. 이와함께 기독교계에서도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문규현 신부와 강희남 목사(범민련 의장·78) 석방을 촉구했다.

전주 서학동 성당 신자들과 사목회는 문규현 신부 석방을 촉구하는 미사를 매일 갖기로 하고 안기부 항의방문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각계 사회·종교단체들은 문규현 신부 즉각 석방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보법 적용,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문규현 신부를 구속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보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공안당국은 문 신부가 주석공을 방문하여 고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했다는 것을 혐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 신부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발었다고 해도 이는 그의 신앙과 민족적 미덕에 따라 사제의 양심으로 행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성직자들과 양심세력들의 주장이다.

공안당국은 또한 문 신부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통일대축전(북측)에 참가했다는 것을 혐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일대축전은 지난 6월 북한의 제의를 남한 당국이 받아들여 남, 북, 해외동포들이 함께 치르기로 한 행사다. 그런데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애초 이 행사를 함께 치르자고 받아들였던 당국자부터 먼저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실제적 진실을 떠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국보법을 이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약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또한 문 신부가 통일대축전(북측)에 참가하여 북한 당국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축전 참가 결정을 하루 전에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한 것 등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철저히 보도통제되고 있다. 공안당국은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해 양심 세력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선택적·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통보 줄짓는다 도내 노동자 정리해고 맞선 파업 잇달아

정리해고가 도내 민주노조운동의 싹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만도기계 17일부터 전면파업

지난 8월 27일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조합은 익산역 광장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군산대 노동조합 등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바람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500여 명이 함께 했다. 집회를 마치고 만도기계노조는 노동부 항의 방문을 진행했으며 시내 선전전과 더불어 익산 태령상호금고의 불법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노동부 항의서한 전달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익산노동사무소 앞을 가로막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만도기계 권농현(26), 유병만(31) 조합원 등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협의회 정진국 대외협력부장은 사복경찰들로부터 못매를 맞고 연행됐다.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항의로 연행된지 30여분만에 풀려났다.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는 파업 12일째가 되는 지난 28일 저녁 '가족과 함께 하는 정리해고 철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결의 밤'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익산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고용안정협약서 이행, 부실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15일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8월 24일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25%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입장을 노조측에 통보해왔다.

군산대, 구두로 12명 해고통보

군산대학교가 소비조합 내 식당을 용역화하면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는 지난 8월 5일 구두로 통보됐

다. 국립대노조 군산대 지부(지부장 김연태)는 "학교측이 복수노조 논란을 무릅쓰고 소비조합노조를 결성하는 등 군산대노조 죽이기에 앞장서 왔다"며 "원래 직자운동을 감수하고 운영해온 식당을 이제와서 직자를 핑계삼아 용역화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대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28일 오후 군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대자동차, 태령금고...

40여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지부의 경우, 울산 본조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본조의 타결내용에 준해 해결될 전망이다. 조합이 수용한 정리해고 대상자 277명 가운데 전주지부에서는 3-5명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8명 가운데 노조지부장 등 간부들만 4명이 해고된 태령상호신용금고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투쟁(평화와 인권 111호 참조)도 계속되고 있다.

현자, 여성조합원부터 정리해고 도마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여성노동자가 우선 정리해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이 277명의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44명의 식당 여성노동자 전체를 우선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133명 가운데 핵심조합원이 다수 포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가져온 중재안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식당 여성노동자 + a'라는 공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식당의 여성조합원 평균연령은 47세이고 이 가운데 70%가 사실상 가장들로 구성돼 있다.

[알림] 전화번호 바뀜

8월 23일부터 전주·완주 전지역 전화번호 국번 두 자리기 세 자리(XX → 2XX)로 바뀜에 따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화번호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전화: 276-1253
- 전송: 274-7486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평화와인권에 큰 힘이 됩니다.

- 구독문의: 0652) 76 - 1253
-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 국민은행 512-21-0065-982
- 우체국 402297-0062450
- 전북은행 535-21-0304454

조합간부 닥치는대로 연행

만도기계 위원장 등 6명 연행 구속

고용안정협약서 이행과 부실경영진 퇴진을 주장하며 13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도기계 노동조합 황성근위원장과 간부 4명이 29일 0시 30분경 경찰에 연행됐다.

황위원장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구속수감됐고, 신시연 문체국장 등 4명은 황위원장 연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긴급 구속됐다.

황위원장 여형소식을 들은 노조원 40여명과 금속연맹 충청본부 간부들이 아산경찰서에 집결해 폭력연행, 노조탄압용 체포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경찰은 전경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연행자들의 면회를 거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만도기계 유희용 경주지부장도 경찰에 연행됐다.

29일 현재 만도기계 평택, 경주, 대전, 아산 등 각 공장에는 전경과 사복경찰들이 투입돼 조합간부들의 차량을 수배하고 신분카드를 복사해가는 등 조합간부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도기계 노사는 지난 2월 23일 '인위적인 감원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용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고용안정협약을 어기고 8월 24일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원 4천 2백여명 중 1,090명을 해고하고 '상여금 200% 반납, 기본급 5% 삭감'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다.

구속 노동자 김영삼 때보다 많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 구속, 수배된 노동자들이 김영삼 정부 때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속·수배자 216명

27일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월 25일 현재 자체집계 결과 구속자는 53명, 불구속기소 29명, 보석 7명,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수배자는 127명으로 총 216명이 구속 및 수배 등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6명은 김영삼 정부가 집권하던 93년부터 97년까지의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숫자로 소위 국민의 정부라 일컫는 김대중정부의 노동탄압 수준이 도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97년 구속수배자수가 35명, 김영삼 정권시절 가장 많았던 때는 95년 170명에 그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개혁을 내세우는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표>연도별 구속수배 노동자 현황

	98(1-8월)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구속수배자수(명)	216	46	161	170	95	35

[행사와 동정]

- ▶ 전북 여성실업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9.3(목) 오후 6시 30분 / 전주 가톨릭센터 2층 교육실
문의 : 0653-851-2453
-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
9.1(화) 오후 5시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문의 : 02-752-42-3180
- ▶ 제1기 사회복지 학교 · '대당실업과 사회복지'
9.11-9.29 오후 7시-9시 30분 / 전북대학교
전북대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 전북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소
- ▶ 제15기 장애우 대학 · 제2기 장애우 의료학교
9.3-11.12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문의 : 02-521-5364
- ▶ (가칭)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9.2(수) 오후 6시 창립총회 / 9.3(목) 오전 11시 기자회견 / 향린교회
- ▶ 익산 만도기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반팔티 판매
문의 : 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 (0652-274-4228)

경제위기와 시민운동

최원규(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때 전북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적이 있는 신선의 노래가사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이 노래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음악에 관한 한 무지한이며 음치인 나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대목의 가사 내용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가사내용을 확대해석하면 잘난 사람(또는 가진 사람)은 잘난 만큼 편안하게 살고, 못난 사람(즉 못 가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열악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닐까?

어제 보도를 보면 경제위기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다. 고금리 덕분에 가진 사람(잘난 사람; 상위소득계층 20%)들의 소득은 0.9%가 증가하였는데, 못 가진 사람(못난 사람; 최하위소득계층 20%)들은 정리해고나 감봉이다 하여 소득이 12.0%나 줄었다고 한다. 그 결과 상위소득계층이 소비를 9.9% 줄인 반면 최하위계층은 8.9%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소득 또는 소비 1% 증감이 갖는 의미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르므로, 위 통계치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못 가진 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감요하고 있고, 한국의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신선의 노래에 나오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가사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하겠다.

경제위기에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사회 각 부문에서 긴장이 높아 가는 상황에서 개혁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당위가 되어 있다. 사회개혁이든 정치개혁이든 또는 경제개혁이든, 개혁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의사를 결집하여 이를 사

근본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정권과 밀착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권의 부속기관일 것이다.

회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속성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공존하면서 사회발전을 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념지향으로 볼 때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시민단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항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50여년 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맞이하여 시민단체들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일대 변화가 야기된 것처럼 보인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과거 소위 '관련단체'라고 지칭되었던 시민단체들의 입지가 약화된 반면,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던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아니 그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들간의 상대적 위상과 활동내용에

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의 관련단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견제함'을 과시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여전히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시민운동만이 주목받고 또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균형 잡힌 일이 아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권에 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시민단체들에게 호감을 가질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항상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시민단체들을 결코 쉽게 여길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과 밀월관계라고까지 표현되는 밀착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권의 부속기관일 것이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시민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전통적인 관련단체들은 그들의 무늬를 다소 진보적인 것으로 포장하거나 또는 정권 쪽에서 무늬포장에 개입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경우 정권교체 이후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과거 정권에서의 관련단체 정도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정권에 다가가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발전을 위한 비판과 감시와 견제를 존재근거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한 시라도 이러한 존재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의 잘못을 따지는 시민단체들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오만에 빠질 수 있는 정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존재이유는 있다.

북한을 생각하며...

함세웅 · 아우구스티노(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원장 · 서울 상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편집자주] 이 글은 <사단법인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는 '연구원 후원회 소식지' 「기쁨과 희망」 9월 1일자(제23호)에 실린 것이다. 글을 쓴 함세웅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남북단의 일원으로 8월 1일부터 18일까지 북한에 체류했다. 이 글에는 보수언론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면하고 있는 문규현 신부 일행의 행적과 그에 관한 진실의 일부가 담겨있다고 판단되어 여기 실는다.

북녘을 향한 설레는 마음으로

남북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연인을 비유로 얘기하곤 합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 이후 우리는 남북의 통일도 가능하리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단의 벽을 깨는 작업이 과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른바 합법적 절차를 따라 북을 이해하는 작업과 함께 문익환 목사, 임수경양, 문규현 신부 등 선구자들은 법절차를 넘어서서 남북을 넘나들어 옥고까지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치른 대가는 엄청나게 컸었지만 그로 인해 남북의 벽은 낮아지고 불신의 벽도 제법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8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기로 해 우리는 제각기 그 대화의 결실 등 통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던 터에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꿈은 깨어지고 이른바 조문파동으로 남북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어 오늘날까지 남북의 공식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새정부의 통일정책으로 남북의 공식대화가 재개되고 많은 이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승훈, 박승원, 문규현 신부 등 9명의 사제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규현 신부의 방북 승인은 북의 관계자들에게도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북한 방문 전 북경에서 남북의 관계자들이 사전 대화를 할 때에 문규현 신부가 북경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북한의 대표들은 큰 반기움과 함께 새정부에 대해 경이를 표했을 정도였습니다.

개혁의 하나 됨을 바라며

어쨌든 우리 일행은 8월 11일 북경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방문객들은 대부분 해외 교포들이었고 그 중에는 미하원의 북한실정조사단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우들과 함께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와 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평양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장충성당에 도착한 우리는 교우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규현 신부의 경우, 한 주일의 삶을 종합해보면, 그는 참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남쪽의 이상적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규현 신부를 환영했고 그것은 참으로 온갖 가식을 깨고 남은 참 인간성의 표현이었습니다. 89년 임수경(수산나)양과 문규현 신부님의 행적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한 청년 교우의 부모들은 신자였지만 자신은 신앙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바로 89년의 사건을 통해 교회와 사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의 행적은 당시에 TV생방송으로 북한 전역에 방영되었기에 하느님, 교회, 사제, 신자, 통일, 민족 등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실을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물론 짐작은 했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한 셈입니다.

그래도 남북의 만남에는 많은 갈등과 의견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미사봉헌도 그 자체가 독립된 신앙행위기보다는 '민족공동체에 특이 되는 한'이라는 조건하에서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제적, 사목적 고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북의 일치와 화해에 저해되는 내용은 우리 모두 고백비밀처럼 간직하고 일치와 화해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를 통해 승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규현 신부님이 관문점 통일 축전에 참가한 사실에 대해 언론의 오해와 오보는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대화에서 북측이 우리 사제들에게 제시한 관문점 축전 참가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봉헌의 연계과정에서 우리는 단호히 그 제안을 거부하고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참으로 긴장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차적 조건을 거부하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사목자로서의 신앙적 자세인가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고뇌했고 특히 사색이 된 대표가 머리를 숙이며 '신부님, 신부님들은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 있는 저희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어린 양들도 보살펴서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때 우리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내용을 머리에 올려보았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이행을...

그렇습니다. 민족의 일치를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7명의 사제들은 8월 15일

"우리 사제들은 남북의 일치를 위해 어떤 때에는 남북의 당국자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10시에 장충성당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며 북한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를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했고 2명의 사제들은 판문점에 가서 직언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오직 문규현 신부님만이, 우리 사제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한 정부의 일관된 통일 정책과 북측에 대한 질타, 그리고 거래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회가 좋은 나쁜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 사도들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실 왜곡을 일삼는 일부 언론은 우리 사제들이 북한 당국에 이용당한다고 했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그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은 정치와 법 논리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법을 지키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의 사목적 임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 즉 인내, 유연성, 듣는 자세, 무엇보다도 결코 단절과 결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오라기 같은 것이라도 대화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적 바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제들은 하느님의 더 큰 섭리를 생각하고 이 기회를 은총으로 알고 판문점 북측의 공개석상에서 과감하게 통일을 위한 기본적 원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①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통일 대축전을 북에서 거부한 데 대한 잘못된 점, ②7.4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이행 촉구, ③남북 대화의 재개, ④거래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월 14일 저녁 북경을 통해 통일부와 안기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통제된 상황에서 기도하며 사제들이 택한 이 결정은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판문점의 선언으로 북측에서는 매우 언짢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측의 그 자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역설했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남북의 일치를 위해 어떤 때에는 남북의

당국자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 성명들 (요약)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민간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문규현 신부의 사법처리 방침이 자칫 민간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에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당국은 문규현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문규현 신부 구속사태를 보며 현 정부가 독재정권 시절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정권임을 확인하게 됐다. 검찰이 문규현 신부를 구속한 것은 무르익어가는 공안정국을 유지시켜보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7조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간통일교류를 전면 허용하라.

■ **민주노총 전북본부** =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구속명분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명분으로 구속함으로써 문규현 신부로 상징되는 양심적 종교인과 대한민국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술책으로 간주된다. 왜 '국민의 정부'는 문규현 신부의 '반북발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친북적 요소'가 있는 부분만 과장하고 있는지를 그 지의가 의심스럽다. 문규현 신부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 **문규현 신부 석방대책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외 21개 천주교 단체)** = 이번 사건은 소위 국민의 정부가 '대북화해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이나 종교단체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를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는 발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었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에는 물론 현 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 화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작태로서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공안당국이 내세운 구속 사유라는 것은 그 정당성을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 구태의연한 것으로서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권의 반시대적 반통일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3 호

1998년 9월 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D) onespark(전.나.북)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만도사태, 노동자 분노폭발

정부, 대규모 경찰·중장비 동원해 폭력진압

회사측의 고용협약 파기와 부당정리 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던 만도기계 노동조합 7개 공장에 1만 7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파업이 강제적으로 진압됐다. 경찰병력이 투입된 3일 하루에만 2천 2백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발행인 자율

경찰은 3일 오전 6시에 맞춰 헬리콥터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페퍼포그(최루탄 발사기)를 동원해 농성자 해산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합원 검거에 나섰다. 익산공장에서는 세 살 박이 아이로부터 임신부에게까지 최루탄이 난사됐다. 이에 앞서 경찰과 대치과정에서 부인이 정문에 와 있는 것을 알고 마중나갔던 최선규 조합원이 20여명의 경찰에 에워싸여 몽둥이에 구타당한 뒤 연행됐으며,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한 조합원 가족 여성이 병원에 실려갔다. 경찰병력 투입 소식을 듣고 협상을 위해 달려온 문정현 신부(군산 오룡동 성당 주임신부)가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9월 5일 현재 구속자는 이충연 지부장을 비롯해 8명이다.

회사의 약속파기가 파업 불리

만도기계는 에어콘과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회사다. 만도기계 노사는 지난 2월 23일 "인위적인 감원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10일 회사측은 이를 파기하여 4천

5백여 조합원 가운데 1천 1백 63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상여금 삭감과 임금상승체불로 반실업상태에 놓여있던 만도기계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째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 공동대표 권영길, 김중배 등)은 만도기계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단(단장 문정현 신부)을 구성해 지난 8월 29일과 31일 각각 회사측과 노조측을 방문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역시 만도기계 정리해고를 둘러싼 마찰은 '고용안정협약'을 사측이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현안과 회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자금, 주택융자금, 작업용품, 주야간간식, 종합검진 등의 중단과 기타 복지 관련 부분을 축소하는 것과 통상임금의 30% 삭감까지 감수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1인당 5백만원에 이르는 임금체불도 감내해왔다.

한편 정부가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은 "고용조정 사안은 중요한 근로조건인 하나이므로 이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따라서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 파업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만도기계에 대한 정

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된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반대=불법파업' 아니라 만도기계 조합원과 가족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연맹 전북본부,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등은 5일 익산역 광장에서 대규모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강제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범국민'도 4일 향년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찰 투입은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했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부 당국이 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민은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 자체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어난 것이고 오히려 이에 대항한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노동자와 재일교포 노동자들이 김대중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과 파업 강제진압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전일본 항만노조 관서지방 건설지부 니시나리 분회'와 '일본 제철 원정정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재일 고려노동자연맹' 등 3개 단체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만도기계노동조합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우리들은 한국 정부의 만도기계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단호히 규탄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정부는 만도기계 구속·연행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제위기와 부실경영의 주범인 재벌총수와 기업주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유린 관련자 처벌해야

문규현 신부, 무죄석방운동 확산

문규현 신부 석방 운동이 날로 확산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문신부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인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교수)는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국내외의 각종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유린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등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는 부당한 구속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구속"

첫째, 문신부가 북한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김교수는 "사제단이 허가를 신청하고 통일부가 허가한 사제단의 방북목적은 평양장충성당 건립 10주년을 맞아 성모승천대축일에 기념미사를 봉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제단의 방북에는 일단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북경에서 평양에로의 FAX 교신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8.15대축전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 이런 방식의 행사가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규현 신부에서 잠입·탈출죄의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 팩스 원문과 안기부에 보고된 팩스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선행 팩스가 이미 범죄를 구성하고 후행 팩스에 범죄의 고의성을 은폐하기 위한 가공행위가 있어야 잠입·탈출죄의 고의가 성립할 텐데, (안기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이 팩스 내용을 안기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선행 팩스의 내용 삭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금수산 기념과 방문 및 방명록 서명행위에 대해 김교수는 "경애하을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 통일을 기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안기부와 검찰의 주장은 사제의 순수한 신앙행위로써 이를 처벌한다면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통일대축전 참석행위에 대해서는 "문신부가 사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설문을 낭독했고, 이 연설에서 북한의 문제점을 당당하게 말한 행위는 찬양·고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기부 불법행위 처벌해야"

이에 덧붙여 김교수는 "안기부의 불법적인 팩스 도청행위는 '불법의 과실도 불법이다'라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는 안기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인권유린행위의 악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사법적 판단이고 국민의 신체를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로써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현역 전북지역 종교단체들도 문규현 신부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목회자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한상열 목사·교백교회)는 "평화적으로 8.15통일대축전 행사를 치르고 참가한 강목사와 문신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4일 저녁에는 문신부가 주임신부로 있는 전주 서화동성당에서 600여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국기도회가 열려 문신부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4일 오전 전주교구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도 카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신부 석방을 촉구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제단은 찬양·고무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폐지를 촉구

했다.

(→3면에서 이어짐)인 25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국회에 상정된 규제완화법안 반대집회를 가졌다"고 전하고 "이 개약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직장투쟁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남 목사 석방 촉구

지난 3.13 특사로 석방됐다가 8.15 특사가 있는 날 연행돼 구속된 강희남 목사에 대한 사회운동단체와 종교단체들의 석방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규현 신부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435-050)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20 문규현(수번 22)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와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한국인 여성 피살

미군 용의자 수사 제대로 못해

한국인 여성이 미군 용의자에 의해 살해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시 '아메리카타운' 내에서 달려한 전소를 운영하던 박순녀씨(66)는 지난 달 29일 등과 팔, 목, 가슴 배 등 10여 군데를 갈고 찢려 살해된 채 환전소 자신의 집 안방 잠문 속에서 오후 5시경 발견됐다. 경찰은 오른손과 가슴에 피를 묻힌 채 달려가는 미군을 보았다는 주민들 제보로 살해 용의자 할버슨 에릭(21·미군 제8비행단 병장)을 사건현장 부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왼쪽상반부(팔)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 점 △오른손 중지 마디가 찢어져 있는 점 △오른쪽 하복부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 점 △용의자가 살고 있는 집과는 반대방향으로 뛰어갔던 점 등을 들어 할버슨 에릭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용의자 할버슨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버슨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6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팔과 손가락 등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과 비행기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범죄 미군을 구속수사할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제22조)이다.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한국 측에서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용의자 할버슨은 검거 직후 미군 헌병대에 의해 미군기지 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72시만 만인 9월 4일 평택 미군교도소로 이송됐다. 경찰과 검찰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으로 범죄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과 용의자로부터 채취한 지문과 머리칼, 혈액, 일치여부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신부)은 4일 성명서를 내 "미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올해들어 4차례나 발생한 미군범죄와 관련해 아무런 사과나 수사의 결과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95년 11월에 시작한 한미행정협정(정확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은 미국의 완강한 태도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미국측은 또 지난 97년 5월 27일 한미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경찰, 신체의 자유 억압 영장기각률 크게 증가

경찰이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수가 울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함부로 인신을 구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주지검에 신청된 사법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3318명으로 지난해 동기(2536명)보다 30%가 늘었다. 이 가운데 425명은 경찰 조사가 부족하거나 혐의점이 약해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은 12.8%(425명)로 지난해 동기 8.1%(20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425명 가운데 265명은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현행범 등으로 체포된 뒤에 영장이 청구된 경우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문과 머리칼, 혈액 일치여부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 466명 가운데 경찰 등에서 청구한 인원은 442명으로 94%나 되었다.

평준화 즉각 실시 여론 비등 도교, "연내 결정" 되풀이

군산·익산지역 고입 평준화 환원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익산·군산 '고교평준화 공동대책위'는 지난 1일 오후 도교육청 정문에서 고입평준화확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학부모와 교사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촉구대회에서 공대위는 비교육적인 고입경쟁을 중단하고 평준화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규탄사를 통해 △익산지역 시민 8만명이 평준화요구 서명에 동참했고 △시의원 34명 중 24명이 평준화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공대위는 특히 "현행 전라북도의 비평준화 교육행정은 경쟁형입시제의 폐지와 전인교육을 천명한 김대중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침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평준화 시행을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군산·익산지역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방법 개선 종합연구 계획'을 수립한 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고입 평준화 환원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1일 재차 천명했다. 또 10월 중순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지역 평준화실현 대책위' 대표인 이수현 신부는 "이미 대책위가 학생·교사·학부모 등 시민들 절대다수가 평준화 환원을 바란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도교육청이 연내 결정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도 노동법 개혁

일본에서도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주노동당 전북본부 일본방문단 일행이 지난 1일 전해왔다. '노동법 개혁반대 집회'에 참석한 방일단은 "이날 보기 드물게 많은 숫자(2면으로 이어짐→)

특별
기표

문규현 신부는 무죄이다

조 문 익(민주노동당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9명의 신부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방북에 앞서 통일부에 방북허가신청서를 냈고,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방북은 북한측에 의하여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사제단이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방북목적은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라고 쓰자, 평양에서는 "범민련의 대표로 오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라는 팩스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사제단은 "8.15 대축전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범민련과 전혀 무관하며, 이런 방식의 행사가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팩스를 보냈다. 안기부와 검찰은 바로 이 문구를 물고 늘어졌다. 문규현 신부가 처음부터 8.15대축전에 참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도청으로 얻어낸 팩스 원문에서는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도리어 북한측의 일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문규현 신부는 자신이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 중 위 부분이 언제 어떻게 빠져 있었는지도 모른 채, 팩스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에서도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사제단은 "우리는 평양장충성당 건립 10주년을 맞아 성모승천대축일에 기념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방북했다."라고 방북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사제단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을 방문하였고, 이 때 문규현 신부는 "경애하을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통일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

문규현 신부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 적과 동지 사이일지라도 적이 죽으면 그 영전에 가서 의례적인 수사(여기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수사)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는 바처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북한을 찬양·고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사제단이 평양에 가서 보니 8월 15일 장충성당 미사는 일정 자체에 잡혀 있지 않았다. 북한측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제단은 다음 날(15일)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였다. 북측의 장재철 위원장은 "신부님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북한천주교회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양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사제들에게 90도로 절하면 서 눈시울을 적셨다. 14일 오후 북측에서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다. "어느 분이든 2명만 판문점에 보내 주신다면, 같은 시간에 장충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16일) 미사도 약속하겠습니다."는 것이었다. 이 때 사제들의 고뇌는 다시 시작되었다. 만일의 경우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측의 조건을 들어 주는 대신, 본래의 방북목적인 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철수해야 하느냐라는 고뇌에 빠진 것이다. 이 순간

사제가 걸어야 하는 길은 어느 것인가? 사제들은 신앙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양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단이었다. 이 경우 국가의 법은 이들에게 다른 결단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법적 비난가능성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제단을 대표하여 문규현 신부와 전종훈 신부 2명이 판문점 8.15대축전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사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설문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 1) 사제단은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 봉헌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지금 같은 시각 7명의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것, 2)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통일대축전을 북측에서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는 것, 3)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것, 4)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것, 5) 겨레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위 발언 중 어느 것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서울지법은 서울지검이 신청한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하였다. 한 평생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제가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안기부는 불법적인 팩스 도청을 통해서 팩스 교신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북한에서의 활동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인가? 이는 구속권의 행사를 넘어서서 이 나라 사제들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문규현 신부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현 정권은 문규현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4 호

1998년 9월 14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미군이 쏜 유탄 민가에

미군부대 인근마을들 사정거리 안 위치

최근 군산미군기지가 계속되는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군산시 '아메리카타운'에서 발생한 달리환전상 박순년씨 살해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기지 내 사격장 인근 마을에 유탄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김두일씨(35·상업) 집에 난데없는 굉음과 함께 미군이 쏜 M203유탄발사기 연습탄이 날아들었다.

사고 피해자 김씨에 따르면 이날 입신 9개월된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데 건물 뒷편에서 가스폭발소리 같은 '펑' 소리가 나 놀라 나가 보니 조립식 건물 벽면에 오렌지색 분말 자국과 함께 지름 5cm 가량의 구멍이 파여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미군 영내 사격장에서 해안 쪽을 향해 발사한 유탄발사기 연습탄이 날아든 것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훈련이 인근 마을에 빈번했기 때문이다.

M203 유탄발사기는 개인화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무기로 최대 사정거리는 300m이다. 따라서 사격장과 마을 사이에 야산이 있지만 직격탄과 달리 조

명탄이나 유탄발사기의 경우 마을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된다.

김씨는 이에 대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는 아니지만 만일 연습탄이 아닌 실탄이었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냐"며 "방안에는 민사인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 마을 이장 이호근씨(37)는 "지난 해에는 조명탄이 날아들어 마을 뒷편 야산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며 "때때로 미군의 야간사격 훈련이 있을 때마다 총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격장 이전이나 다른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 중 사격장에서 종종 유탄이 날아들어 불안한 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하제마을 주민들은 해당 부대장에게 이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서를 주민들에게 써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이 주둔하고 훈련이 계속되는 한 이런 사건은 빈발할 것"이라며 "미군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이나 조처를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군범죄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원성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잔인한 살해사건을 비롯해 날로 더해만 가는 미군범죄에 대해 현 군산

미공군부대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 11일 금요일집회를 열어 계속되는 미군범죄와 사고를 규탄하고 미군부대 측에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신부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서학동성당 매주 5백명 시국기도회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11일 저녁 7시 30분 전주 서학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 12명의 신부와 천주교 신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신부 구속 16일째를 맞아 열린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사제단의 이번 방북은 정부의 합법적 절차와 사회적 양심에 따른 것이며 방북활동도 남북간의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문신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제단과 법률학자들의 판단이며 따라서 문신부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이 심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와 안기부의 수사권을 철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제단과 신자들은 "문규현 신부가 석방될 때까지 시국기도회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서학동성당에서 계속 열고 오는 18일 저녁에는 촛불행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4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이적동조(제7조) 외에 잠입·탈출(제6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문신부를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사제 문규현신부
석방을 위한 평화대행진
매 주 (화) 오후 8시
문: 서학동성당 - 3대백회청

“실업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고용실업대책 전북본부, 최초 실업노동자 거리행진

IMF 경제위기로 하루에 1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실업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전북에서는 12일 오후 2시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0652-272-4040) 주최로 '제1차 전북지역 실업자대행진'이 조직됐다. 참석자들은 "실업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코아백화점 앞에서 덕진 종합경기장 앞까지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300여 실업자와 예비실업자로 자처하는 학생들은 △400만 실업자 모두에게 실업수당 지급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확대할 것 △무단불법해고 방지를 위한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근비축소 통한 실업자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참석자 일동의 명의로 '실업자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수백억을 숨겨두었다는 재벌, 불어 나는 이자를 주체하지 못하는 졸부들, 정당 민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는 국회의원들이 넘쳐나는데, 선량한 우리 실업자가 굶주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생색내기 일회성 대책만을 남발하지 말고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선언문은 이어 "실업자 대표가 참가하는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재벌 중심 경제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진 참석자들은 실업에 분노하는 노동자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고 행진했으며, 학생들은 경쟁과 실업의 현실을 상징하는 촛국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또 국회의원회관 전북도지부 앞에서 실업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는 약식집회도 가졌다.

이날 행진은 '실업, 민영화 및 IMF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주

요 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대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반민중적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반대 △정리해고 중단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 빈국 국민 소비율 겨우 전체의 1.3%

UNDP 보고서, 세계빈부격차 심화

전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풍요의 밑바닥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9일 밝혔다. UNDP가 이날 발간한 전세계인들의 인간개발에 관한 연례 보고서는 세계 전체 인구 중 10억 이상이 '문맹, 저소득, 사회주류로부터의 배제 등 인간적인 박탈 상황과 저지된 삶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소비는 24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이와함께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환경파괴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결한 공장지대, 대로변, 쓰레기장 주변 등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부자와 빈자간의 소비격차는 더욱 커져 20%의 고소득 국가 국민들이 전세계 소비의 86%를 점유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들은 겨우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유한 나라 국민 중 1억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3천7백만명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1억명 이상이 집없이 떠돌고 있고 2억명 정도가 예상평균 수명이 60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안내

- ▶ 15일 (화) 오전 10시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자
- 김형렬 외 5명 (업무방해, 폭행)
- 류기준 (업무방해, 폭행, 기물파손)
- 이상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

8월이후 구속자

-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김형렬 (수번268), 김형준 (443), 류기준 (738), 이동희 (108), 구자영 (274)
- 주소 : (560-28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번지 전주교도소
- ▶ 문규현 신부 (국가보안법)
- 주소 : (435-050)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수번 22)
- ▶ 강희남 목사 (국가보안법)
- 주소 : 상동 (수번 171)
- ▶ 만도기계 익산공장 구속자 이충연, 육종근, 정병욱, 이승엽, 이장호, 신동진, 최선규 (이상 7명)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상조사,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액수에 관계없이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 부탁드립니다.

구독문의 :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변화 안해" 싸네 총장 '국보법 개정', '준법서약제 폐지' 등 촉구

국제엠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양심수 전면 석방의 실패 등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안보와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이 국보법 개정과 양심수 석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의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대통령은 떨지 않은 장래에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는냐"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싸네 총장은 특히 준법서약제 폐지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준법서약제 폐지는 양심수에게 신념에 반하는 서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득권 세력과의 긴장이 있겠지만 인권문제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준법서약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수와 정치범 무조건 석방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행위 허용 △구속된 파업주도 노동운동가 석방 △결사의 자유 보장 △감옥 내 인권보장 △안기부 구조개혁 △고문 및 가혹행위,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형수 감형과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권고했다.

피에르 싸네 총장과 엠네스티 관계자들은 지난 9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12일 방한 일정을 마치

고 출국했다.

'영남위' 15명 전원 기소

대해위, "짜맞추기식 공안조작"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일명 등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자 15명을 전원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김일성 부자에 대한 철저한 충성 요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합법당 건설, 북한동포들 기 운동에 김정일 보위투쟁 차원에서 적극 참여" 등을 공소이유로 밝혔다.

또한 "영남위원회의 궁극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였으며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 부산대책위원회'는 반박성명을 통해 "검찰이

여전히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 북한동포들끼리 합법적 정치활동조차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매도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영남위원회 사건은 정리해고 반대, 민중생존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 조작사건이며 조직의 결성과 가입에 대해 최소한 6개월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짜맞추기식 공안조작 사건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산시민연대 출범

민주노총 시협·전교조 등 참여

지난 5일 해산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이 그 소속단체였던 민주노총군산시협의회, 군산농민회, 전교조군산지회, 군산사랑청년회 등을 포괄해 12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로 발족했다.

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견제·비판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시민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정책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에 대한 시 주요 권고사항

-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수인들, 그리고 과거 정부 하에서 불공정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정치적 수인들을 석방하라
- 노조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행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월에서 7월 사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노조활동가들을 석방하고, IL0협약 제87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라
- 안기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 고문,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하라
-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 여성,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라
- 법집행 공무원들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1998. 9. 국제엠네스티

서울국제민중회의 선언문

신자유주의 맞선 세계 민중연대 결의

[편집자 주]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세계민중들의 저항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민주노총, 지식인연대, 민변 등 26개 사회단체들이 조직위를 구성·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사빠띠스파', 유럽의 실업차 운동 '유로마치',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 등 외국의 운동단체들이 참여했다. 민중회의는 11일 종합토론을 거친 뒤 아래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1998년 9월 8~12일 서울에서 "IMF에 도전하는 민중: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약 35명의 해외 활동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가 매우 의미있고 충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 회의의 마지막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과 역사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하기 시작했음을 선언한다.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지구적인 저항의 증인이자 활동가인 우리는 모든 민중이 성, 인종, 나이, 계급, 또는 신념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신자유주의는, 초민족 기업과 자본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전략으로, 민중을 단지 생산과 소비의 요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 계급, 국가와 지역 사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4.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복지, 인간 삶의 원천인 지구를 파괴하는 이윤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것의 악영

향은 실업의 증가, 민중의 권리와 복지의 파괴, 이주노동자의 권리 박탈, 빈곤의 확산으로부터 대량학살 토착민들에 대한 인종청소에까지 이르고 있다.

5.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현재의 경제·정치적 위기가 오늘날 자본주의적 지배의 뿌리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자주성의 증대, 생존권의 보장, 불평등의 제거, 적절히 유지된 환경, 원주민의 자결권 보장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도전하고 진정한 대안을 추구할 책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6. 우리 참석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서로간에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의 다양한 요구와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의미있는 국제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7. 이번 회의와 그 참석자들은 IMF와 MAI, 구조조정 프로그램 (탈규제, 자유화, 민영화), 정리해고에 맞서는 한국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무조건적인 연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은 물론 100명 이상의 민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탄압과 정치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를 요구한다.
8. 우리는 또한 주권협정에 따라 한국, 방글라데시, 그리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같은 조치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취해져야 한다. 미군은 미제국주의가 세계 민중들에 대한 억압과 간섭을 확장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9. 우리는 이 회의가 단지 첫 걸음임을 인식하며, 공동의 목표를 쟁취하고 한 마음의 민중과 조직들, 특히 IMF와 기타 신자유주의에 희생된 사람들과 연대를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의 결의를 확인하는 바이다.

위협받는 노동자 '안전권'

안전관리자 계약직화 추세

최근 삼성물산이 건설부분의 안전관리자를 전원 계약직으로 전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제도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련, 건설실용노동조합의회, 한국산업안전학회 등 노동·학술 단체는 7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작년 말부터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조항이 대폭 완화되는 등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돼 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6만6,770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고, 경제난까지 더해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제도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직의 고용안정도 보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물산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난달 말일자로 35명의 안전담당 부서 전원을 사표서를 제출케 한 뒤 이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안전관리자를 축소할 계획이며, 동부건설도 최근 임직원의 50%를 감원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담당부서를 토목공사팀에 통합한 바 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5 호

1998년 9월 2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전.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경찰, 평화행진조차 막아

문신부 석방촉구 촛불행진 원천봉쇄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폭력화 우려' '돌발사태 우려' 등을 구실로 내세우는 경찰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

지난 18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전주 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대표 김진화 신부)이 주최한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 시국기도회'를 마친 신자와 학생 등 500여명이 서학동성당에서 중앙성당까지 약 1.5km에 걸친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현되지 않았다. 사제단은 애초 20여명의 신부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만장파피를 든 신자와 시민들이 촛불을 한 손에 들고 이를 뒤따르는 평화적인 '촛불대행진'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5일 이후 사제단측에 전화를 걸어와 "일몰 후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 "촛불행진은 더더욱 허가할 수 없다"며 촛불행진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진이 예정됐던 18일에도 경찰은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대단히 자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날 사제단 측에서 촛불행진 강행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서학동성당에서 전 동성당까지 약 500m 구간만 인도를

따라서 행진하는 것은 허락하겠다"는 수정입장을 밝혀왔다. 중앙성당까지의 촛불행진을 허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몰 후에 더구나 촛불을 드는 것은 예기치 않는 돌발사태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촛불행진 불허 이유가 결국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6일 전국공안부장검 사회의를 열어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금지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집회와 시위 자체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금지통고제도'가 적극 활용될 경우 현행 집시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공공의 안녕질서' '교통체증' 등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금지통고 남발이 예상돼 왔었다.

한편 사제단 측이 '평화적 촛불행진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자 경찰은 약 7개 중대 1천여명의 병력을 성당 입구와 성당으로 통하는 도로 요소에 배치해 촛불행진은 무산됐다. 경찰 지지선을 뚫기 위해 사제단과 신자들은 서너 차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성당 구내에서 문규현 신부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저녁 10시경 해산했다. 이들은 '문규현 신부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이종찬 안기부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또 사제단은 '교우님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문규현 신부에

대한 고무·찬양·잡입·탈출죄 적용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 6개월' 양심수 대량 양산

민가협 보고서, 보안법위반 계속 증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6개월(2.25~8.25) 동안 구속된 양심수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기간 동안 시국사건 구속자는 하루평균 2.3명꼴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의 구속자 127명에 비해 3배가 훨씬 넘는 427명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민가협'이 보고한 '국민의 정부' 6개월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구속자 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월별로 보면 3월 구속자 13명, 4월 구속자 31명에 비해 5월 구속자가 8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6월 구속자 90명, 7월 구속자 111명, 8월 구속자 (8.28까지)는 9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모두 245명으로 전체 구속자 427명의 57.6%에 이른다. 민가협은 "이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 법 적용과 무작위적인 인신구속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잦은 7조(교무찬양)로 구속기소됐다" (-> 3면에 이어짐)

미군행적 규명대회
 9.25(금) 오후 2시
 금산 미술관까지 앞
 군산비국기자 인권망 찾기
 0652-276-1253

인권법 · 국가인권기구 밀실추진 문제있다

최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추진과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인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인권침해의 주체이기도 한 검찰과 법무부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이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 또한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등 전국의 29개 민간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시작부터 왜곡되거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3년 세계인권회의 이후 유엔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고 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 새정부 100대 과제에도 포함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환영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다.

국가인권기구는 기존 법·제도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생기는 인권침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때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까지 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준헌법적 기구다.

따라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과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민주적 토의과정과 공감대 형성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검사 및 명과 법무부의 밀실행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이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의 내용조차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안은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하고 '시장권고' 수준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이는 당초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시정하고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했는데도 국민인권위가 준사법권을 갖지 않게 되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과감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되풀이할 게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공추위 집행위원장 곽 노현 교수는 "인권탄압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도 이번 인권기구 설치를 계기로 인권존중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국가인권위는 독립성과 실효성 면에서 그에 걸맞는 기구로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앞으로 △민간단체 법안 마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 △인터넷을 통한 공추위 활동내용 공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부문 및 지역 조직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실업자 생활지원조례안' 도의회 청원

'실업자 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벌여온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가 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했다.

행사와 동정

▶ 실업자 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때 : 9월 21일 오전 10시
곳 : 전북도의회 기자실
주최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 IMF체제하 사회적 위기와 실업문제 토론회

때 : 9월 25일 오후 1시 30분
곳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
주최 : 호남사회연구회

간접노동자와 무규현 신부를 부와 석방하라!

▶ 문규현 신부(국가보안법)

· 주소 : (435-050)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수번 22)
▶ 강화남 목사(국가보안법)

· 주소 : 상동 (수번 171)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 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열사 명예회복 · 의문사 진상규명 시급 열사 범추위, 특별법 청원 등 움직임 활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창복(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열사범추위 공동대표) 외 52,898명이 여야 국회의원 35명의 청원소개서를 첨부해 지난 15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은 청원소개서에서 "지난 독재정권 당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재정권과 악덕 기업주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에 대해 국가차원의 예우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청원서는 특히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의 부도덕한 행위는 진상이 밝혀질 경우에 일어날 엄청난 과문으로 인해 철저히 은폐돼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청원서에는 법안제정을 통해 △민족민주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한 의심이 드는 사건에 대한 재심 △국가차원의 추모 및 기념사업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의문사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 등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서에는 전국에서 받은 52,898명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천화, 김현, 이해등)는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민주현정

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다 운명한 민족민주열사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아무런 추모사업도 없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열사범추위는 지난 14일 '제3차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을 갖고 19일까지 6일간을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331명의 열사에 대한 추모기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펼쳤다. 행사는 14일 저녁 명동성당 앞에서 '문규현 신부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한 조성만 거리 문화제'를 펼치는 것을 비롯, 동대문 주변에서 전태일 열사 거리문화제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사들의 영정을 마련해 치러진 합동추모제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열사범추위에 의하면 확인된 경우에만 한해 박정희 정권 이래 93명의 민족민주인사들이 분신 등으로 자결했고, 18명이 타살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42명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사고나 병으로 운명한 사람이 73명에 이른다.

(→ 1면에서 이어짐) 고 밝혔다. 이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사건은 △공개단체에 이적단체를 적용해 무차별 구속하거나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관련자를 대거 구속한 점 △6개월 시한부 환자,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등 인권침해가 큰 점 등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 정부' 6개월 동안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9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의 연행·구속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백지화 음모세력 주장' 발언 책임져야

전주시민회, 유 지사 '망언' 규탄

전주시민회(공동대표 송기도·이광철)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주시민회는 "유 지사의 발언은 새만금사업을 불모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환경파괴론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유 지사에게 "이번 발언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환경·시민단체와 도민들에게 공개사과와 더불어 무엇이 '정치적 도구'인지 '음모세력' 운운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유 지사는 지난 14일 전북 일실군에서 시작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 이름을 빌어 전북발전을 방해하는 음모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주시민회는 또 지난 9월 4일 전주지검 주성영 검사가 유 지사 비서실장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유 지사가 주선한 자리인 만큼 책임을 지고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고 밝히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참석자들의 명단공개 및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주 검사에 대한 징계 방침 입장에서 후퇴해 주 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천안지청으로 전보발령했다.

주 검사는 만도기계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다음날인 지난 9월 4일 유 지사가 주선한 회식 자리에서 폭행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 자리에는 주 검사를 비롯해 유 도지사과 비서실장, 그리고 안기부, 경찰의 정보관계자 등이 참석했었다.

인제까지 공권력은 자본의 사병역할을 할 것인가?

염경석(민주노동당 전북본부장)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노동자 탄압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또는 정적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 헌정 사상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정권에 의한 공권력의 피해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권력의 피해자였던 대통령께서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때나마 민주인사 김대중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아무 책임없이 정리해고된 분병에 맞서 생존권사수를 위해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지난 8월 정부가 한달이 넘도록 진행된 현대자동차의 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해 2만명의 경찰을 울산에 집결시킨 일을 기억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노사분쟁을 자율이 아닌 공권력이라 타율로 노동자를 때려잡으려는 국민의 정부의 공권력을 보며 "소외된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그리고 협상을 촉구하는 노조집행부에 대한 압박이 지경에 이를 것임을 믿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중재안을 노사가 받아들여 평화적 해결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자본의 나팔수 보수언론의 반동과 30%가 넘는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수용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반란으로 중재안이 부결되고 자본의 나팔수 보수언론을 필두로 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자 정부는 9월 3일 전국 7개 지역의 만도기계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로써 한가닥 남았던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그래도 후사나 하는 나의 믿음은 깨지고 말았다.

만도기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필요최소한의 행

사라는 점을 상실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경찰력을 소용할 곳의 공권력이 아니라 자본편향의 폭압적인 '자본가의 사병'으로 또 '노동자 사냥꾼'으로 만든 사건이다. 먼저 파업의 발생원인이 2월 23일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한 사용자의 약속불이행에 있으며, 파업의 진행 방법에 있어 사무직과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을 방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정부가 제시하는 불법파업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은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월권행위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없으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는 작금에 정부의 일방적 불법규정은 지나친 자본편들기다. 실사 불법파업이라 해도 노사자율에 의해 분쟁이 종료된 후에 노조집행부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다.

만도기계에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로 전가되었고 정권과 자본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감히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조는 공권력으로 때려잡겠다는 소중한 경고를 노동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위대한 정권과 자본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이용된 공권력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자본의 사병' 내지 '노동자 사냥꾼'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상유래없이 7개 사업장에서 2,500명의 노동자가 연행되고 35명의 노조간부가 구속되었으며, 익산에서만 7명의 구속과 32명의 불구속기소 그리고 100여명의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부과

등 대대적인 노동자사냥을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익산에서만 폭압적인 공권력행사로 갈비뼈3대가 골절되고 척추가 금간 조합원 부인과 공포의 눈빛으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경찰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어린이 등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노동자 연행 후 사업장에 대한 수색과정에서 탈의실 및 노조사무실에 있던 금품을 경찰이 훔쳐가는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만행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로 개탄할 일이다.

김대중 정부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5.27노사정합의와 6.5노정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동자죽이기' '노동자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중재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된 현대자동차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은 실무교섭대표를 연행하여 실무교섭을 지연시키고 노조간부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대책위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노조원 부인을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와의 약속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지? 자본의 이익은 중요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가족의 생존권은 무시해도 옳은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가 아닌 진정한 공권력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역사적 진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때려잡는 데 사용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권력은 마침내 붕괴하고 말 것이다.

노동자와의 약속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가?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6 호

1998년 9월 29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D) onespark(전.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국가인권위 권한 유명무실

법무부안, 독립성·실효성 거의 없어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 시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25일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시안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은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특수법인 형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국민인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국가기관과 국민 일반의 차별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이사를 제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처결과를 법무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11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은 당연직으로 관계부처 차관을, 선임 이사는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정부, 특히 법무부의 강력한 통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의무' 조항 역시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국가기관(안

기부, 검찰, 경찰 등)이 거부할 경우 별다른 조치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사의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종종 무시되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나 작성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모두 7가지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사각지대로 방치될 위험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UN인권위원회의 '국내인권기구 설립 권고안'과 국제엠네스티의 '인권위원회 설립기준'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위 기구의 권고와 외국의 선진적인 입법사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속 빼놓은 셈이다. 실제로 UN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가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제엠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인 보안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음바든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실험을 위한 토론회

일: 10월 1일(목) 오후 6시

장: 전주 캐톨릭사대 3층 강당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국가인권기구 공추위·공동집행위원장 박노현)는 "인권법은 헌법적 법률로, 국가인권기구는 준헌법적 기구로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무부측 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 뒤 12월 10일 인권법을 공포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직자 도와야

전북 고용실업본부, 전국최초 실업자 생활지원조례 청원

저소득자 및 실업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에서 청원됐다.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고희석 외 5명·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노동길씨의 의원청원 형식으로 전북도의회에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조례'를 청원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포괄해 보호하고 △이를 위해 소득기준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을 설정하며 △노인에 식권 제공 △결식학생을 위한 급식비 보조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비 보조 △쉼터, 상담소, 직업훈련 및 전업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할 것 등이다.

조례 청원을 추진해 온 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에 거의 전무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가운데 (→ 2면에 이어짐)

새만금호 정화해도 소용없다 감사원, "제2의 시화호 전략 우려"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여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대책으로는 수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어촌연구소 담수호연구실이 작성해 25일 공개한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33km의 방조제를 막아 조성할 예정인 새만금호가 물막이 공사도 하기 전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한계수질인 4급수로 전락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오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연간 4억7천만톤, 금강상류 용담댐으로부터 연간 1억4천만톤의 희석수를 각각 공급받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경우 새만금호의 물막이 공사(2001~2003년 예정) 직전 오염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6.2PP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최선의 대책' 마련해도 '한시적'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13개소 뿐인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을 37개소로 확충해야 하며, 1백80만평 넓이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한편, 전주 및 익산 하수처리장에 국내에선 아직 적용된 곳이 없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대책조차도 한시적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농어촌연구소의 수질예측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의 것이어서 방조제 공사를 완료해 물의 흐름이 막히고 간척지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 수질오염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4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그 이유로 감사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주목적을 당초 농업용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했고 재원조달방안과 환경오염대책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감사원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종합개발계획을 국내외기

업 등에 배부하는 등 사업시행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확정 전에 이를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유종근 지사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새만금지구가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7천3백여원이 투입된 만큼 백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자 문책해야 할 듯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북도는 "추진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사업중단을 권고한 것은 아니"라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전북시민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4일 '새만금간척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책임자를 인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감사원 결과에 깃발이 가지는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 새만금간척사업의 비효율성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간척사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없으며 환경파괴적인 개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면에서 이어)

짐 → 하나를 지역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하루속히 이를 수용해 98년 겨울을 힘들게 나아 할 실업자들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업대책 토론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전북도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실업대책 제시와 마련을 위해 전념해왔다. 또한 이번 조례(안) 청원에 윤찬영 교수(운동본부 정책위원회·전주대)를 비롯한 도내 학자들의 연구와 참여도 빛을 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와 동정

▶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때 : 9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곳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회의실

▶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 석방촉구와 신부 집단폭행 규탄 평화행진

때 : 10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곳 : 전주 중앙성당

▶ 위폐사건피의자 데일 허프 1차공판

때 : 10월 1일(목) 오전 10시
곳 : 전주지방법원 203호

강화남 목사와 문규현 신부를 석방하라!

▶ 문규현 신부 (국가보안법)
· 주소 : (435-050)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 (수번 22)

▶ 강화남 목사 (국가보안법)
· 주소 : 상동 (수번 171)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전북경찰, 사제복 입은 신부 집단폭행 경찰 책임자, '정치집회니까 불법' 망언

매주 금요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문규현 신부 석방촉구 평화대행진'을 벌이고 있는 전주 서학동 성당에서 사제복을 입은 신부가 사복경찰에게 '짜려' 집단구타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5일(금) 저녁 8시 반 서학동성당을 비롯한 전주교구 신자 400여명과 전주교구 사제단 19명은 미사를 마치고 성당마당에서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읽기, 문규현 신부의 수번호를 적은 하루감옥체험, 노래부르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신자들이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1500여명이 갑자기 성당문을 에워쌌다. 신자들은 "이제 행사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왜들 그러냐"며 항의했고 전경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흥분한 신자들을 달래며 전주교구 사제단 대표 김진화 신부는 경찰책임자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경

찰이 병력을 약간 뒤로 빼자 먼저 앞쪽에 나와 있던 일행과 대열이 끊겼다. 이때 사복경찰들이 밖으로 밀려난 안봉환 신부(익산시 창인동 보좌신부)와 노래패 소리꾼 단원 한 명을 성당 맞은 편 전주교육대학교 안으로 끌고 갔다. 목격자들은 "전경병력을 지휘하던 사복경찰관이 안신부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다른 사복들이 달려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복경찰들은 이들을 화장실로 끌고가 목저거리를 하며 발로 마구 짓밟고 구타했다. 또 한 몇 명은 팔짱끼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제단은 두사람을 데리러 갔고 1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입술이 찢긴 안봉환 신부와 노래패 단원이 나타났다.

두 사람으로부터 진상을 들은 사제단은 그날의 책임자 전북 도경 정보과장을 불러내어 항의했다. 그러자 정보과

장은 사고는커녕 "이쪽에서 먼저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은 "팔을 뒤로 잡힌 채로 끌려갔는데 누구를 때릴 수 있었겠냐"면서 어이없어 했고 사실확인을 하러 교육대 수위실로 가서 폭행한 사복경찰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고 다른 경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챘다. 경찰병력을 지휘한 도경의 한 간부는 이 자리에서 "성당 구내라도 정치집회면 불법"이라고 말해 전북경찰의 의식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신자들은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서도 아니고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을 전경도 아닌 사복경찰들이 어딘가로 끌고가 폭행하는 만행은 전두환·노태우 때도 없던 일인데, 더군다나 사제복을 입고 있는 신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짓밟는 만행을 어찌 지지를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신자들과 사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국의 모든 신자들과 양심세력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타당한 안봉환 신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군범죄 해결된 것 하나없어 시민들 분노..

군산시민모임, 미8공군부대장 퇴진 요구

군산미군 울돌머 여섯차례 범죄 지난 2월 위조지폐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의 박순녀 할머니 살인사건까지 울돌머 부쩍 늘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범죄의 비중에 상관없이 해결된 사건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데 있다.

가지 앞에서 매주 금요일 12시에 금요일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은 지난 25일(금)에는 울 상반기에 있었던 미군범죄에 대한 강력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미군부대 지키는 한국경찰 - 관망하며 즐기는 주한미군 이날은 얼마전 미군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이영선 목사(군산시 나운동 과수원교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목사는 "사고 그 자체보다 한국인을 경시하는 미군들의 시각에 대해 더욱 큰 분노를 느꼈다"며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한미행정협정 때문일 것"이라며 "한미행정협이 오히려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은 특별히 그동안 시민모임의 5차례의 공개서한에 한 번도 답신하지 않은 미공군 부대장과 면담이 있기로 되어 있어 시민모임은 집회를 일찍 마치고 부대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미공군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자 분노한 참석자들은 잠궤진 정문을 밀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당황한 전경 1개 중대가 허겁지겁 뛰어와 위병소(정문 안쪽으로 20m)에서 참가자들을 제지했고 이 와중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미군들의 범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경찰이 이에 항의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서슴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분노했고 경찰관계자에게 항의하던 최중수 신부(시민모임 집행위원장)를 비롯 참가자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군 헌병대와 한국 경찰과 대치해 있던 시민모임은 1시간 가량 항의시위를 벌인 후 '미군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부대장 퇴진'시키는 싸움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해산했다.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상 단속

무에체 단속 항의 노점상 불신 증대

전창욱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노점을 시작해 의류 도매업자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씨는 중구청의 단속으로 인해 7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날 또다시 단속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게 위해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부인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단속으로 3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겨 남편이 몹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의 몸에 불이 붙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전씨를 둘러싸고 있던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며 노점상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8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씨의 부인과 노점상인들은 사건 당시 전씨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전경과 중구청 사람들이었다며 경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료제공 : 인권허우소식]

전자주민카드 왜 미련 못버리나

전북공대위, "완전 폐지" 주장

24일 행정자치부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보다 전자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상의 편리함보다 프라이버시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경제사정 때문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굳이 연기운운 한 것에 대해 "이미 몇해 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 읍·면·동사무소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썩고 있는 등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벼랑끝 선 은행노동자들

파업 앞두고 '반국가사범'으로 찍혀

29일 예정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주원서) 소속 9개 은행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반국가행위'로 규정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주동자를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해 전원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도 지난 26일 노조가 파업하면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22일부터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융노련 주위원장은 "지난 15일 교섭중에 노조간부를 강제연행한 것이나 은행장들이 노조와 협의없이 MOU(이행각서)를 제출한 게 문제를 더 크게 비화시켰다"며 정부가 이행각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위원장은 또 "정부와 언론의 매몰찬 비난에 은행원들은 직업인으로서 자존심이 허물어졌다"면서 "비단 생존권 차원이 아니라 이제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은행원들의 정서"라고 밝혔다.

예정된 은행노조파업은 결국 정부와 금융감독위가 획기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출겨문 추석 보내십시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정당화 도구"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투쟁

지난 8.15 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감옥을 나온 양심수 두 명이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24일부터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중인 이들은 정선(26·96년 서총련 조동위원장, 덕성여대 수학과 92학번), 김태환(27·97년 서총련 집행위원장, 흥익대 경영학과 90학번) 씨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군산교도소와 경주교도소에서 각각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왔다. 24일 오전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준법서약제도 철폐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철폐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준법서약에 대해 "준법서약은 인권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기는커녕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 2의 사상전향제도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보안법 잔존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으로 나온 지나온 기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토로하고 "역사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과 자괴감으로 괴로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준법서약제 폐지 투쟁에 대해 법무부는 "이들이 서약서를 쓴 것이 위장인 것으로 드러나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25일 관할경찰들을 보내 '1차 경고'를 보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7 호

1998년 10월 1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해야

전북토론회, "법무부 지나친 개입이 문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도 법무부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최로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주 가톨릭센터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시민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인권법 시안(草案)' 수준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목표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헌법상으로도 강제수사권 부여 가능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환(전북대법대) 교수는 "법무부의 계획대로라면 이사회 구성과 인권위원 임명에 법무부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역시 인권감시대상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헌법 규정으로 인하여 검찰의 산하 기구화하게 될 것'이라는 법무부 주장

에 대해 김 교수는 "현행 헌법의 해석 상으로도 인권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그 방법으로 "검찰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듯이 인권위원회 산하에 특별검찰조치를 갖는 것"을 제안했다.

인권실태조사기구 운영해야

두 번째로 발표한 박민수(朴敏秀) 변호사는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간단체주도의 '인권조사기구'를 인권법 제정 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 보호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자유권적 기본권 이외에 사회권적 기본권도 인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역시 현재의 사회권 보장 실태를 먼저 조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희운(이희운·나실교회) 목사는 "정부가 (인권법안을 준비하면서) 좋은 자료를 참고하면서도 정부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 골라 수용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과 실용성이 대폭 삭제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

면서 "민간단체가 국민 지변의 의견을 듣고 대변해야 실질적으로 인권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법이 졸속으로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인권법과 관련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10월 한 달 중에 모두 마무리하고, 국회의 심의에 넘긴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인권법의 제정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강희남 목사를 석방하라"

탄원서와 기도회 등 잇달아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와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전주 남문교회에서 '강희남 목사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강목사는 지난 8월 광복절에 범민련과 한총련이 서울대에서 주최한 8·15 평화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곧바로 연행돼 현재 기소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다시피한 강목사가 그토록 열원하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국민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79세의 나이에 같은 죄목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독교장로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측은 청와대에 강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 국가보안법 구속 사건 제차 공판

때 : 10월 16일(금) 오후 2시
곳 :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

미군 유탄폭음 임신부 조산

박순녀씨 피살사건도 해결 힘들 듯

미군에 의한 범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그 피해도 날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이들 범죄를 처벌·근절하거나 합당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8월말 발생한 군산 '아메리카타운' 달라현전상 박순녀씨 피살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지검이 의뢰한 '피의자 할버슨 에릭에 대한 유전자 감정'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과가 "에릭의 범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과학수사과는 전주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올려보낸 11 종류의 감정뢰를 가운데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꽂초 4점, 박순녀씨의 손톱 유전자형에서 각각 에릭의 유전자 지문 일치 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것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감정뢰를 가운데 에릭의 상·하의 및 신발, 칼에 묻은 피 등에 대해서는 "DNA가 분리되지 않아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미군 사격훈련장에서 쏜 유탄이 터져 이후, 당시 임신 중이던 집주인 김두일씨(35·상업)의 아내가 폭음의 충격으로 같은 달 말에 정정보다 한 달 앞서 쌍둥이를 조산했다. 아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있다.

담당의사는 "유탄사건이 있기 전까지 산모와 태아는 모두 정상적인 건강상태였다"며 "조산의 원인은 유탄의 폭음에 의한 충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네 살이 지나서도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화위조) 혐의로 구속돼 첫 번째 공판정에 나온 미군 피고 테일 엘 허프는, "칼라프린터와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한 것은 사실

이지만, 한국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벌인 일"이라며 "정말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실사 미군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미군범죄 피의자에 대한 한국 검찰의 구속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이들 미군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심검문 피해 국가배상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씩 청구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인권하루소식에 의하면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두경철의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검문을 거부하다 연행된 뒤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소속과 신분, 검문목적 등도 밝히지 않아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으며, 이에 전경들이 수송차량으로 끌고가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목설을 하며 △강제로 가방을 뒤지고 △안경을 벗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신청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신청인에 대해 행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 동안의 불법감금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

꼈다"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민중 기본권 사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때 :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
곳 : 조계사 대웅전 앞

▶ 전북지역 실업극복 국민운동 심포지엄

때 : 10월 22일 오후 2시-5시
곳 : 전북도청 회의실

강하나 목사와 문규현 신부를 석방하라!

▶ 문규현 신부(국가보안법)

·주소 : (435-050)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 (수번 22)

▶ 강하나 목사(국가보안법)

·주소 : 상동 (수번 171)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성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전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국 대학생 72%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에서 총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보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진보 가로막는 장애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들은 국보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학생과 지식인, 노동자 등 진보집단을 지적해 국보법이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해온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국보법의 존속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1.7%가 국보법 폐지에 동의했고, 57.09%가 국보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국보법 제2조에 규정된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13.2%)보다 반대한다(82.9%)가 월등히 높아 국보법이 반통일적 악법임을 지적했다. 이는 '국보법 폐지'의 이유로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이 23.6%로 나타난 것이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국보법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양심의 자유 구속(32.7%)'을 들어 초헌법적 내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28.2%)',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23.6%)', '문화예술 등 표현의 자유 억압(13.0%)'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27.0%로 나타났다. 그중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이유가 35.4%로 가장 많았

다.

한편, 대법원의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질문에는 전국 대학생 40.0%가 '합법적인 총학생회연합체에 기해 철회되어야 한다'고 대답해 한총련이 전국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15.0%가 '한총련을 친북성향의 일부세력이 장악하고 있기에 올바른 판결이다'라고 답해 한총련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줬다.

준법서약 반대이유 '양심의 자유 침해' 또 지난 8·15사면을 기점으로 한참 활발한 논쟁이 되었던 준법서약서와 관련하여 '정부가 양심수 석방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48.4%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26.9%가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과거 김영삼 정권시절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정치수배 해제'라는 주장으로 발이 되고 있는 조계사 농성에 대해서는 '정무차원의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가 42.6%,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를 받았기에 조건없이 해제되어야 한다'가 28.6%로 압도적인 수치로 조계사 농성단의 정치수배가 부당한 것임을 시사해줬다.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

'전자우편'건 흐지부지 잊혀질 듯

'인터넷 전자우편' 사건에 대한 일대소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지역 고등학생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전주 전라고등학교 교장(이

연규·63)을 김제 용지중학교 교장으로 전보조치하고, 이에 앞서 청와대에 인터넷 전자우편을 보낸 이 학교 2학년 임아무개(17) 군에 대한 무기정학이 철회됐다. 그러나 청소년과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월말 임군이 청와대에 <존경하는 대통령께>라는 제목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해 보낸 민원을 전라교측이 문제삼음으로써 비롯됐다. 학교측은 "사실이 아닌 것을 외부에 고발하는 '무고행위'를 임군이 저질러 징계가 불가피했다"면서 임군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합리화했다. 임군은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9월 15일부터 정규 교과목 수업에서 제외된 채 운동장 청소와 제조작업을 강요당했고, 이에 앞서 "알고 보니 그것은 오해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청와대에 다시 보낼 것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군의 민원내용은 △밤 10시면 버스가 끊기는데도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고 △책걸상이 키와 맞지 않아 불편하다 △교육청의 양계이트는 엉터리 △자유시간이 없어 취미를 살릴 수 없다 △보충수업비를 다른 시설에 사용한다는 등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과문이 커지자 학교측은 임군에 대한 징계를 근신으로 낮추고 그 기한도 근신 결정을 내린 날인 9월 19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일 도교육청의 인사조치가 뒤따랐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교 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학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및 자발적 단체 구성의 권리를 시급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을 자행한 경찰들의 지휘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당연히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각자 금 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확

특별기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자리 매김

김승환(전북대법대 교수)

인권침해 없는 국가는 없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속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보장의 수준을 놓고 서로 비교의 잣대를 갖다 댈다. 이를 하여 인권선진국과 인권후진국이 그것이다. 그러한 구별은 구별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권후진국에 가해지는 인권신장의 압력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인권후진국은 그러한 국제사회, 더 정확하게는 인권선진국의 압력을 내정간섭·주권침해라는 이유로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이제 인류공동체의 제1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인권선진국은 인권신장의 선진국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후진국과 비교하여 인권침해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더욱이 건전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인권침해사례가 많지 않은 인권선진국도 인권침해사례가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한 고백 위에서 그들은 인권보장의 기본법인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침해사례를 감시하고 교정하는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권후진국이다. UN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해 왔다.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라는 압력이다. 대표적으로 UN이 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이 있고, 「고문금지협약」이 있다. 우리보다 경제적·정치적 수준이나 교육적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국가들도 가입해 있는 이들 조약에 우리나라는 가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뒤늦게 이들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그것도 구차한 유보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이다.

항들을 두면서 가입하였다. 그것이 현재의 인권보장수준이다. 새 정부는 과거의 정부들과는 뭔가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 주어야겠다는 각오 내지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으니, 우리도 이제 번듯한 인권법과 인권위원회를 갖추자는 것이 그것이다. 금년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12월 10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국가의 인권적 면모를 일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가 밝히고 있다.

이 중차대한 작업을 위하여 법무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흔하던 법률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조차도 생략하면서,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인권법안을 만들어 10월 1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민인권위원회」라는 특수법인을 만든다. 주요기구는 이사회와 인권위원회로 한다.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당연직 4인의 이사와 7인 이내의 선임이사로 구성하며, 선임이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정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9인 이내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위원의 임면제정권을 행사한다. 인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인권위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그 정도는 법관보다는 약하다. 인권위원회는 직권 또는 진정으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진정을 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는 사실조사·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합의의 권고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강제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인권위원회의 생명은 그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의 확보에 있다. 그러나 법무부안이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면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회의 정관을 허가하고, 7인 이내의 이사의 임명에 대한 제정권을 행사하며, 이사회를 통해서 인권위원의 임명과 면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공안기관과 관련된 술한 의문사들, 인혁당 사건과 같은 법원의 판결의 형식을 빈 사법살인(司法殺人) 등 인권에 관한 과거청산을 인권위원회의 과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일반감찰조직에서 독립한 특별감찰조직을 인권위원회에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식논리를 빌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이다. 대통령에 소속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인권위원회를 만들라!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8 호

1998년 10월 1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D) onespark(전.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국민 정부에 통한의 슬픔”

문규현 신부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지난 8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14일 구속기소된 문규현 신부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문규현 신부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고무·찬양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신문에서 하인수 검사는 “북한에 왜 갔느냐가 중요하다”며 “문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가 의도를 갖고 방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으며 “문규현 신부는 ‘밀입북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당당 미사 봉헌이었고, 일정에 없던 통일대축전 참석은 방북 사제단 일행 모두의 고뇌어린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 과정에서 하 검사는 문규현 신부 일행이 금수산 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 앞에서 90도 각도로 구부러 인사했다’며 개인의 주관만으로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하기도 했다. 또 평양대축전 참석은 방북 사제단 공동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보라”며 핵심에서 벗어나는 질

문을 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평양대축전과 범민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여러 차례 같은 답변으로 부인하는데도 “통일대축전이 범민련 주최가 아니냐”는 질문을 반복해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신문에 앞서 문규현 신부는 20분 가량 진행된 모두진술에서 “오늘 재판에 서는 제 마음은 통한의 슬픔으로 가득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국의 비인간적·비이성적·비상식적·반역사적인 태도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안기부가 사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서도 사제단의 행적을 도청·미행했으며, 귀국 후에도 북경과의 팩스 교신 내용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했으며, 북한에서 활동을 단독행위로 몰아가는 등 왜곡·조작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신부는 “이는 내적으로는 사제단을 분열시키고 외적으로는 사제단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약 200여명이 방청해 이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방청객들은 그러나 검사의 핵심을 벗어난 말들이와 강변 뿐만 아니라 이날 재판부의 권위적인 태도에도 많은

불만을 드러냈다. 담당 판사인 이호원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종류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퇴장”을 경고했다. 결국 재판중 너무 크게 웃은 방청객 한 명이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유현석 변호사 등 네 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 심리 뒤 “공소사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으며, 이날 시간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변호인 반대신문은 11월 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재판정선 통일운동가

강희남 목사도 첫 재판

지난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7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문규현 신부에 이어 재판을 받은 강 목사는 함께 재판정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박창근·문재용 씨와 함께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 목사는 공소장을 받아봤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읽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에 마땅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심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위반 제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범민련 부의장 김양우 씨는 직장안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출두하지 못했다.

문규현신부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10.29(목) 오후 2:30시 / 탑골공원(종각역 하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문규현신부 석방을 위한 천주교태평회

농성투쟁 중 '우발사고' 군산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20명 무더기 기소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2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기소되고 14명은 불구속기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경 기아특수강 정리해고노동자 20명이 정리해고조치에 항의하면서 회사 본관 노무과 접거농성을 시작한지 14일만에 경찰에 연행됐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사원들이 출근하던 12일 농성장소를 노조(위원장 이정석) 사무실로 옮긴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노조위원장이 책임있는 자세로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반면 노조는 농성해제를 종용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실화(失火)가 발생해 노조 부위원장 신원삼(40)씨가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를 발미로 회사측이 경찰 병력을 요청하고, 농성자 대부분이 방화 등 혐의로 연행·구속됐다.

한편 농성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경위서'에서 "이번 정리해고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회사와 노조측의 배신행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족들은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과·부장 및 감독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입사한 뒤 7년 동안 단 한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일해온 사람이 해고됐다"며 "이는 평소 소신과 주장이 분명한 이들을 겨냥한 보복성 정리해고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아특수강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김삼배·36)는 "그 동안 노조 민주화를 목표로 활동해왔거나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선별됐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특히 '기아특수강 민주노동자회' 회원 14명 전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회사가 정상화되면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이미 노사간 합의를 봤고, 정리해고자들도 한때는 조합원이었으니까 대화로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 기아특수강은 지난달 3차에 걸쳐 103명을 정리해고하고 47명을 병역외치시켰다.

몸싸움 해고조합원 부상 군산대, 복직투쟁 중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55일째를 맞고 있는 국립대노동조합 군산대지부(지부장 정연택) 해고조합원들이 총장면담 요구과정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구사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중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운)과 국립대노조 군산대지부에 따르면 해고조합원 10여명이 12일 낮 12시경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본관에 진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최순자씨가 문틈에 끼어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현재 군산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지난 8월 20일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이사장(조성환·군산대학교 총장)은 '적자운영'을 구실로 군산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가운데 소비조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13명의 조합원을 정리해고한 뒤 재발기업인 사에 식당운영권을 수의계약을 거쳐 넘겨줬고, 해당직원들에게는 사와 재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그 뒤 조합원들은 '불법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대학연맹과 해고조합원들은 15일 오후 군산대

본관 앞에서 '부당 정리해고와 폭력사태 규탄 항의집회'를 열고 조성환총장 사퇴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한편 조합원 부상사고와 관련 군산대의 한 관계자는 "총장이 출장중임에도 사전면담 없이 (해고조합원들이) 본관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비관자살

뇌성마비 동생도 살해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20대가 동생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동맥을 끊어 자살했다.

15일 오전 11시쯤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국정마을을 신모(62)씨 집에서 신씨의 아들 정근(28)씨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동생(19)과 동반 자살했다.

아버지 신씨는 "이날 아침 정근이가 동생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근이의 동생은 목이 졸려 숨져 있었고 정근이도 손목 동맥을 잘라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는 너무 정신이 이상해졌다. 동생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유서를 정근씨의 방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군산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정근씨가 지난 4월 정리해고에 따른 직장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온 데다 지난 5월께도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살정위를 조사중이다. [10/16 중앙일보 인용]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액수에 관계없이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 바랍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결국 치매병원 시직영 방침 철회 전주시, 치매병원 민간위탁 결정 - '공익성' 실종 우려

전주에 시직영으로 건립될 예정이던 치매병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치매병원이 반대로 사영리화 수단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는 당초 시 직영으로 추진하던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공기절대부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러나 '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당초 계획을 대폭 조정해 최대 3천병으로 계획했던 대지면적을 최고 1천5백평까지로 축소하고 설계기간을 약 3개월에서 약 1개월로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도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전주시(양상열 시장 재임 당시)는 당초 전북 전주시 효자동 옛 승마장터에 치매요양 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올 4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시의회 심의에 올려진 치매병원 건립문제는 건립부지 선정을 둘러싼 이해가 엇갈려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새 시장 취임 뒤에도 병원건립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았다. 시는 김원주 시장 취임 당시 '전주비꾸기 시정 100대 과제'라는 책자를 통해 완산보건소를 주관부서로 시가 직영하는 노인치매병원을 신축한다는 전주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시는 주관부서를 완산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로 이전함으로써 시직영이라는 종전 방침에서 후퇴하고,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 오다 결국 오는 12월말까지로 예정된 국비(15억 6천여만원)반납기한을 앞두고 '공기 절대 부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전주치매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대표 이광

철)는 지난 15일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가 치매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장은 "민간위탁이 반드시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민간위탁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더 무서운 '합법'

도청 같은 감청 부쩍 늘어

김대중 정부 들어 합법의 허울을 쓴 통신감청이 부쩍 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청회수는 작년 이맘때보다 50% 증가한 3천2백여건이며, 이 가운데 '긴급감청'이라 하여 거의 도청에 가까운 감청이 2천2백여건으로 조사됐다.

통신감청이 '총격요청' 사건의 주요 수사수단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뒤 한나라당은 "당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군수사기관은 전년 동기대비 3.6배, 검찰은 2.6배 통신감청이 늘었다"며 "군 내부에 대한 감시 필요성과 검찰의 편파 보복사정을 위한 정보수집

이 통신감청 증가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전략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박은 감청의 경우 한 라인에 대해 한 수사기관만 감청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4~5개 수사기관들이 동시에 감청하는 경우가 많고, 감청 허가기간인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수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행정권 출범 후 감청 횟수가 22만건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감청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수사당국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데 통신감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서도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도청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사건 '총책'으로 지목된 박경순 씨 집 맞은 편에서 3년 가까이 박 씨의 집을 촬영했으며 촬영된 화면에는 박 씨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싸움 내용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행사와 동정 】

- ▶ **전북지역 실업극복 국민운동 실편지음**
10.21(수) 오후 2-5시 / 전북도청회의실 (문의: 0652-274-8042, 270-2964)
- ▶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 설치를 위한 간담회**
10.21(수) 오후 4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실 (276-1253)
- ▶ **군산 위조지폐발적 피의자 미군 대일 열 허프 선고공판**
10.22(목) 오전 10시 / 전주지법 202호실
- ▶ **세만금 간척사업(백지화될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 결성식 및 거리캠페인**
10.24(토) 오후 2시 / 전주가톨릭센터3층 강당 (문의: 286-7977)
- ▶ **'98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10.27(화) 오후 5시 /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문의: 02-744-1211)
- ▶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10.29(목) 오후 2-3시 / 탑골공원 (문의: 02-763-2606, 747-2445)

밤을 끊고, 감옥에 보내는 세상

문규현(군산 오룡동성당 주임신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 내심으로 이번에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구나 하는 바램이 있었다. 군사독재에 의해 핍박받고, 문민정부에 의해 놀려왔던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울먹거리던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야 한시를 놓쳤구나 생각하였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 참석하였다고 70여명의 강희남 목사를 전격 구속하더니 합법적으로 방북을 했던 문규현 신부를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김대중정권 이후 구속자가 약 420여명 되는데, 그들 중 67%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지난 달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던 김대중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개정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부 국감자료에서는 감청 횟수가 작년 이맘 때보다 무려 50%가 증가한 3200여건이나 된다. 그것도 긴급 감청이라 하여 거의 도청에 가까운 건수가 무려 2200여건이라고 한다. 혹시 누가 내 전화를 도청하지 않을까 하는 감청 공포증에 많은 사람이 떨고 있는데 이 나라가 무엇을 감시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몇 달전 울산 동구청장을 구속한 '영남위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물레 카메라를 24시간 설치해 그들을 감시했다고 한다. 군사정권이 행했던 폭력적인 방법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감시와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집계 160만 실업자, 서울역의 천여 명에 가까운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간의 정쟁으로 이천투구만을 계속하고 있는 보수

**이제 우리의 진로를
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요컨대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장래를 완전히 맡기려고
마음먹지만 않았다면
이미 시작은 된 것이다.**

정치인들. 요 몇 달은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시간이었다. 재벌개혁은 뒷전인 채 수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폭행 또는 구속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현대자동차 노동자 6명, 만도기계익산공장 노동자 7명, 군산 기아특수강 노동자 6명이 구속되었고, 70여명의 불구속 입건과 4명이 수배 상태에 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만하였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지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최소한의 저항마저 불법으로 엄단하여 구속시켜버린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 부패정치인이 착복한 정치자금, 재벌들이 정치권에 상납한 뇌물, 해외에 빼돌린 수많은 돈들이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지금의 실업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눈감고 있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쓰러진 눈물만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회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정책으로 수많은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도시빈민들이 왜 농성을 하는지,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하는지 진지하게 들여보려고 하지

않는다. 지켜온 양보와 화합만을 외쳐대며, 침묵만을 강요한다. 70년대 초반 '개발 독재' 시절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민중들의 삶에 극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엔 이른 것인가?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듯이 정의가 감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임기가 끝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믿기 때문일까. 옛말에 동남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 쪽박까지 깨지면 분명 그 정권은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이다. 선량한 노동자들과 민중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부정 비리 재산을 환수함과 동시에 당장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재벌개혁도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침묵만을 강요하는 곳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점점 더 감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쓸모 없이 보이는 이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 빛도 이름도 없이, 정직하게 땀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는 활동을 오늘도 하고 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들에게 있다. 이들의 힘은 엄청나다.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과의 광범위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제 우리의 진로를 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요컨대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장래를 완전히 맡기려고 마음먹지만 않았다면 이미 시작은 된 것이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기층민중들과 연대하고 저항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19 호

1998년 10월 2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순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전.나.북부)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집요한 시민행동의 성과

위조지폐범 허프에 1심에서 5년형 선고

자신의 군 숙소에서 컬러프린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달러화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미군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위반(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 공군 제9전투비행단 통신대 소속 병장 데일 엘 허프(Dale L. Huff, 25)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제1차 공판에서 한동영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법정에 제출된 증거사실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프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시민모임)은 즉각 논평을 내 "재판부의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이 7.3% (97년 1월-8월 법무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밖에 안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위조지폐 사건이 터지자 미군기지에서 여러 차례 항의시위를 벌이고 검찰의 단독수사권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이미 지난 3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다가 시민모임측의 요청과 조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척시켜왔다.

따라서 이번 유죄판결은 96년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될 만하다.

허프 피고인은 그러나 미군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을 면했다.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어쨌든 기본종은 일"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허프 피고인이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정구속을 면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1966년에 처음 체결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제 22조 5항 (나)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속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는 불평등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SOFA와 부속문서들은 △검찰의 상소 금지 △구속수사 불가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에 대한 호의적 고려 등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주요한 불평등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허프 피고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평택미군기지에 머물고 있으며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96년 8월 입국해 98년 8월로

이미 주한 군복무기간이 모두 만료된 허프 피고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구속이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4월 13일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 리 씨가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해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도주했다.

허프 범장은 지난 1월 19일 이후 3월 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만원권 원화 49장과 20달러권 미화 22장 등 지폐 71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허프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위조지폐를 만든 것이 한국에서 처벌 받는 일인지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규현 신부·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1천만원)으로 풀려났다.

지난 8월 27일 구속 당시 재판부는 문 신부가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바 있다.

문 신부는 석방 후 성당에서 열린 환영미사에서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없이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석방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석방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 외 1명도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민의식 개선 주력할 듯 새만금간척 반대, 전북 시민 대책회의 결성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대책기구가 결성돼 이후 활동이 주목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한국자연보존협회 전북지부 등 31개 단체는 24일 오후 전주 가톨릭센터 3층 강당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상임공동대표 전봉호 외 4인, 새만금 대책회의) 결성식을 갖고, 전국적 대책기구인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와 협력해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대책회의는 이날 결성식을 마친 뒤 코아백화점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반 동안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건네줬다.

새만금 대책회의는 결성선언문에서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권고한 '새만금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환기하는 한편 "감사결과에서 지적되지 않은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와 생산성 등 경제적 가치, 그리고 완공 이후 대규모 호수에 따른 기후변화, 엄청난 토석채취량 조달방안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백지화에 대한 주장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대책회의는 이날 전라북도에 △시민단체와 전라북도 공동으로 새만금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와 전라북도 동수로 토론자를 구성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새만금 대책회의 정책자문단의 김익수 교수(전북대 생물과학부)는 "생태학적으로 보아 이 사업은 넌센스"라며 "세계 5대 갯벌(조간대)에 드는 새만금 일대 갯벌을 단지 개발해야 할 쓸모없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북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2년 리오데자네이로 환경회의에서 확인된 원칙인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개발'을 강조하면

서 "자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의존하는 대신 시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만금 대책회의는 지역언론이 일부 의견만을 듣는 등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전북 신문방송협회' 측에 이들 언론사들의 공정 보도를 촉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결성식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학계·지방정계·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지역 인사 100인 선언」이 전주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주대오 사건 3명 2-3년 구형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 혐의(자주·혁신대오 사건)로 기소된 김진욱(96년 전북대 총학생회장), 오경섭(96년 전북대 총학생회 간부), 임성종(*) 씨에 대해, 22일 공판에서 전주지검은 김씨와 오씨에게는 각각 징

【 행사와 동정 】

- ▶ '98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10. 27(화) 오후 5시 /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문의:02-744-1211)
- ▶ 실직자와 결식아동 돕기 전북도민 걷기대회 및 혁명찾기 어울마당
10. 31(토) 오후 2시 / 전주시청에서 다가공원까지
- ▶ 생존권 사수! 개발해제! IMF 반대! '98 민중대회
11. 8(일) 오후 2시 /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
- ▶ 문규현 신부·강희남 목사 제2차 공판
11. 6(금) 오후 2시·4시 / 서울지법 419호 대법정
- ▶ 자주·혁신대오 사건(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 혐의) 선고 공판
주영식 외 8명 / 11월 4일 선고(오전 9:30 광주고법 제1회소부,
* 1심에서 무죄)

역 3년을, 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이며, 선고공판은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 알림 】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 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액수에 관계없이 독자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기 바랍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요약) "양심과 인격 가두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

- 문규현 신부 제1차 공판 모두진술 내용

[편집자 주] 지난 호(제118호)에 16일 문규현 신부에 대한 첫 공판 소식을 실었다. 모두진술은 20여분간 진행되다가 판사의 제지와, 바로 이어질 강희남 목사 공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문 신부의 판단으로 약 5분간만 더 진행되다가 마쳐졌다. 따라서 지난 호에 다 실지 못한 모두진술 내용을 이번호에 요약 게재한다. 요약과정에서 지면 관계로 전체내용을 다 실지 못했다.

재판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통한의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프게 확인하는, 소위 '국민의 정부'도 역대 정부와 같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실망에서 오는 통한의 슬픔입니다. 당국의 비인간적이고 비상적인 현실, 그리고 반역사적인 현실이 또한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희망인 재판부 앞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비인간적이고 비상적인 당국, 그리고 반역사적인 당국을 교발하고자 합니다. 이 재판부가 정말 인간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역사를 사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국은 나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조건부 승인과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통일추진 참가의 뜻을 갖고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이요, "8.15 통일추진에 참가하는 등 찬양·교무했다"는 것입니다.

'축전참가 의도한 방북'은 왜곡

나는 먼저 "통일추진 참가의 뜻을 갖고 방북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왜곡 조작한 비인간적·음모적 행위라고 고발합니다. 고발 이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방북 승인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할 때까지 관계기관에 북측 초청 사실을 알리고 방북의 가치와 가능성,

특히 나의 방북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방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제단의 방북이 여러 관계기관에서 의미있게 검토되고 나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되고 승인되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당국이 우리 사제단의 방북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검토한 뒤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라는 고무까지 해준 사실 역시 중요한 사실입니다.

(3) 방북 준비 단계에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것이 아홉명의 사제단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보고되고 함께 확인되고 실행했습니다. '8.15 통일추진'에 나와 전공훈 신부 두 명을 파견한 것도 9명의 사제가 함께 고뇌와 갈등 속에서 선택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어린 선택적 결단으로 우리는 8월 14일 북경에 유학중인 맹재영 신부님을 통해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관계 여론에 보고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적어도 당국은 우리의 고뇌에 찬 결단을 대응적으로 이해하고 신뢰 하리라는 믿음에서였던 것입니다. 정부도 북한 당국의 '8.15 통일추진' 제의에 - 비록 성사되지 못했지만 - 그 의미를 인정하고 동의한 일이라고 사료되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4) 남은 일정을 포기한 채 8월 17일 평양을 떠나 8월 19일 서울 도착 즉시, 우리의 방북활동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협조요청에도 성실하게 응해주었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로 제기된 팩스 문건까지도 일부 문안이 빠져있는지도 모르는 채 제공했습니다. "이 문건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문건을 자세히 살펴본 후 '8.15 축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도 제 스스로 지적해 준 것이니

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국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단순히 '앞으로 유사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왜곡·조작하여 구속기소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홉명이 공동 결정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북한 당국자와 팩스를 교신했고, 그 사실을 사제단 신부들에게 숨겼으며, 그것은 곧 처음부터 '통일대추전' 참석을 의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아가 귀국하여 안기부에 팩스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고의로 훼손하여 은폐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깊이 숙고한 끝에 사제단의 방북을 허락해 놓고 도청, 미행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당국입니다.

이는 사제단 자체를 분열시키고 사제단의 도덕적 위치를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인 음모에 다름아닙니다.

둘째로, 뒤늦은 '소감발표'가 등간한 '도착성명'과 금수산 기념공 방문, 그리고 '8.15 통일추진' 참가 등으로 찬양·교무했다는 공소 사실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처사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1) '도착성명'이란 원래 없었습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 후 사제단 공동대표인 박승원 신부가 "우리는 평양 장충성당 건립 10주년 기념을 맞아 성모승천대축일에 기념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방북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여 후에 평양장충성당에서 9년만의 방북에 대한 소감을 부탁하기에 "준비된 것이 없다. 성당에서 다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8.15 통일추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해 준 것에 불과하고 미보도를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